

제362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7월25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질병관리본부 소관
- 다. 국민연금공단 소관

상정된 안건

1. 업무보고 2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질병관리본부 소관
- 다. 국민연금공단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명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컴퓨터의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번 1차 회의 때 대부분 위원님들 새로 오셔서 인사를 좀 나누었는데 지난번에 인사할 기회를 못 가졌던 신상진 위원님 잠시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상진 위원 신상진 위원입니다.

제가 20대 국회 2년 동안 과방위원장이어서 맨날 앞만 보고 있다가 이제 좌우로 고개를 돌려서 하려니까 좀 어색한 점도 있는데 6년 전에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당시 여당 간사로도 일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들, 우리 상임위가 모범적인 상임위로 진행되는 데 조그만 힘이라도 함께 보태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분야에 좋은 정책과 미래 비전을 내놓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또 점차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경제적 여유도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국가 경제와 나라의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또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보건복지위가 정말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또 정부를 견제하고 또한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 또한 자신들의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보건복지 정책과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9월부터 실시되는 아동수당 지급이나 기초연금 인상정책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반복되는 어린이집 사고에 대한

안전문제 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여러 가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써 여러 가지 보건복지는 물론 국가의 미래에 대한 필요한 정책과 시책과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정부에 대한 첫 업무보고는 국민들에게 뭔가 좀 더 희망과 기쁨을 드리기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업무보고에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와 지적을 통해서 회의를 지켜보시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좀 더 보건복지 업무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보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본부 소관

다. 국민연금공단 소관

(10시08분)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소관, 질병관리본부 소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윤소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께서 고 노회찬 의원님에 대한 조의를 같이 표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들어 국회 첫 업무보고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꼼꼼히 또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해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대단히 발 빠르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저희 위원들께서 많이 의견 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자리를 다하지 못하고 먼저 이석하게 되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편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대신해서 오늘 위원회는 이석할까 해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윤소하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박도준 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후 각 기관에 대한 질의를 일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가 미리 배부가 되었으니까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되 지금 시의에 맞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법률과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그간의 양상과는 다른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보다 나은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요구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사람 중심의 의료보장, 소득보장, 돌봄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그동안 마련한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등급제 폐지도 철저히 준비하여 취약계층의 소득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들도 철저히 준비하여 돌봄에서 소외되는 노인과 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25만 원 인상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국민연금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하고 실행하여 국민연금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의 수립,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복지체계인 커뮤니티케어 종합대책의 수립 등 국민 삶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 정신질환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개편 등 보건의료 분야 규제 혁신과 산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주요 업무는 종합적이고 냉철한 미래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효율적인 복지제도의 구축을 통해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도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말

씀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풍부한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적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고 선진복지국가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권덕철 차관입니다.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입니다.

김현주 대변인입니다.

김혜진 감사관입니다.

박민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조태익 국제협력관입니다.

최태봉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이태근 한의약정책관입니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입니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입니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장재혁 복지정책관입니다.

정충현 복지행정지원관입니다.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입니다.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임인택 노인정책관입니다.

김상희 보육정책관입니다.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입니다.

김서중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박금렬 기획조정부장입니다.

나성웅 긴급상황센터장입니다.

김현준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성원근 감염병분석센터장입니다.
고운영 질병예방센터장입니다.
지영미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박현영 유전체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조직입니다.

본부는 4실 6국 15관 1대변인 75과로 구성되어 있고 소속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이외에 국립소독도병원 등 13개입니다.

현재 정원은 총 3344명으로 본부에 801명, 소속기관 2533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총 23개의 공공기관이 있으며 유관단체로는 대한의사회,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많은 보건복지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다음으로 많은 법률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현재 97개 법률을 운용하고 있으며 의료법 등 보건의료 분야에 52개, 사회복지사업법 등 복지정책 분야에 23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인구정책 분야에 20개입니다.

4쪽과 5쪽의 소관 법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재정 현황입니다.

2018년도 총지출 규모는 63조 1554억 원으로 교육부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정부 총예산 418조 원의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37조 6546억 원, 기금 25조 5008억 원입니다.

11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입니다.

첫째,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네

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제도화하고 의뢰·회송 시범사업과 진료정보 교류를 확대하여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하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통한 교육·훈련 지원 강화 등 존엄한 죽음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암 관리 강화를 위해 고위험군 대상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치료 후 생존자 대상 통합지지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제공입니다.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의료기관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자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6월에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 의료기관의 감염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질 높은 의료 제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건 의료인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올해 3월에 발표한 간호인력 처우개선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보건 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표준화된 한의약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의료 공공성 강화입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가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추진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중증외상 응급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입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형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점 추진과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 진료 연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시행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비만·음주 등에 대응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겠습니다.

모든 시군구에 정신건강 인프라를 추가로 확충하고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 명을 양성하는 등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에 범사회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건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입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약 300억 원 규모의 초기창업지원펀드도 마련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체외진단기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하고 혁신·첨단 기술에 대한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인허가 규제도 전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병원·제약·의료기기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한국의료거점센터를 설치하는 등 한국 의료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도 더 기울이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소득기반 마련과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첫째,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입니다.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층 소득보장을 위해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당초 일정보다 빨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최대 생계급여액을 인상하는 등 보장 수준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연간 10만 명을 추가로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재산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도 지속 검토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적극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2중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자활일자리 1500개를 추가로 확충하고 자활급여 단가도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 도입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청년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체계화하고 긴급복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민간 복지자원을 우선 연계하는 등 빈곤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장애인 권익 신장입니다.

내년 7월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됩니다. 이를 위해 장애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자체 복지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달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도입하여 합병증, 만성질환 등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진료, 재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 재활병원을 설치하는 등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입니다.

돌봄, 건강,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부처 협업체계,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광역 단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 1단계로 보육, 요양, 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중심으로 17만 개 일자리를 우선 확충하였고 올해 하반기에는 2단계로 17만 명을 추가하여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명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 등 시설 종사자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욕구에 맞는 급여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주민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종합대책을 마

련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중평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수·단전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입니다.

첫째,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그간의 출산율 목표 중심에서 개인의 선택과 삶의 질을 우선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일과 생활의 균형,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등 저출산 핵심과제를 이번 달 초에 발표하였으며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구조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아동투자 확대와 보호 강화입니다.

올해 9월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등 아동에 대한 투자도 더욱 늘리겠습니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구축된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법률상담과 의료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기존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국가·지자체 중심으로 재편하여 공적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로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이상 확충하여 2022년에는 공공보육 40%를 달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를 신규로 도입하고 민간 매입도 활성화하는 한편 아파트관리동 2층 등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하는 등 확충 방식도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신축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지자

체 보조율을 차등화하는 등 지역에 균형적으로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장시간 보육 내실화 등 보육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아동 특성,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표준보육비용도 산정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예 따라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방과 후 시간 등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모형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협력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아동 이용비율을 늘리고 기본운영비 인상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편안한 노후 지원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세대 간 형평성,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중합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대해서는 내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빨리 인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등 기금 운용의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점 추진과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4만 개 이상 늘리고 직무역량지표를 개발하는 등 맞춤형 교육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민간 일자리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와 치매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가서비스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통합재가급여, 가족상담 강화 등으로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요양실 시범 도입, 요양보호사 교육 개선 등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입니다.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해소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에 선택진료비 부담을 전면 해소하고 본인부담제를 개선하였고 4월에는 상복부 초음파, 7월에는 상급병실 2·3인실을 건강보험 적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로 국민 의료비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을 병·의원급으로 확대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3600여 개의 의학적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뇌·혈관 MRI 검사, 하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신생아 검사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급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의학 분야의 보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공·사 의료보험 연계도 추진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작년 3월 국회에서 합의로 부과체계 개편 방안이 마련되었고 금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자는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성·연령에 부과하던 평가소득을 없애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축소하는 한편 보수 이외의 임대·금융 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보수 이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고소득·고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향후 부과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형평한 부과체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입니다.

치매인구의 급증으로 가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9월에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상담·검진·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관과 요양병원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고자 합니다.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를 시행하고 신경인지검사와 MRI 등 치매 검사 비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습니다. 경증치매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였고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치매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전담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치매안심병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정식 개소를 마무리하여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중증치매 독거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금년 9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커뮤니티케어 추진입니다.

고령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재가·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인 커뮤니티케어를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확대, 통합재가급여 도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설 등 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등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퇴원 이후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중간집 시범사업, 돌봄서비스 연계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분류체계와 수가를 개선하고 읍면동 돌봄서비스 종합안내와 민간 복지자원 등 지역사회 인프라와의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9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연계, 주거 지원과 중간집 운영 등 선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과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노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분배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저소득층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이번 달 18일에 관계부처 합

동으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올해 9월까지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20% 이하 노인에게는 30만 원까지 조기 인상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노인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8만 개 이상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활급여 단가도 최저임금의 80%까지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의 대출 한도를 당초 7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저소득층 소득과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이후 분기별 추이를 점검하여 빈곤의 장기 추세 분석과 중장기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입니다.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8월부터 제4차 재정계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의 투명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정추계·제도발전·기금운용발전 등 3개의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전망과 제도·기금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자 합니다. 투자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등 기금수익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기업과의 대화, 의결권 행사 연계 등 주주권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점점함으로써 기금운용의 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재정계산과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7월 말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입니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장애 특성,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장애 등록 후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도 작년 말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돌봄, 이동, 소득·고용 분야 서비스를 필요도에 따라 종합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감면·할인제도는 기존 수급자의 혜택은 유지하면서 신청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장애 기준을 과도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독거 중증장애인 등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전문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장애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와의 협조도 강화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와 학대 근절 대책입니다.

지난 17일, 18일에 4세 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되어 사망한 사고와 이제 11개월밖에 되지 않은 영아가 질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도입하고 어린이집 전체에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학대나 중대한 안전사고로 처벌을 받은 원장은 5년간 자격이 정지되도록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제 어린이집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근로여건도 개선하여 아이들의 안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실시간 안전확인시스템 도입 의무화 등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통학차량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위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책입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5년간 평균 폭염일수가 증가 추세이며 특히 올해에는 장마기간이 짧아 폭염일수가 더욱 증가하여 온열환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 안전확인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며 경로당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한편 노숙인과 쪽방주민 대상으로 병원 입원, 시설 연계 등 상시 보호체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지자체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은행 등 지역 내 공공시설 무더위 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폭염 행동요령 수칙을 배포하고 건강관리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숙 위원 위원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예, 전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전혜숙 위원 복지부에서 좋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36쪽에 보면 커뮤니티케어 추진 이렇게 돼 있고요 40쪽에 보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또 47쪽에 보면 윈스트라이크 아웃제, 이것 우리 국민들에게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커뮤니티케어를 아는 분이 얼마나 돼요? 왜 이런 용어를 쓰는지…… 그리고 윈스트라이크 아웃

제……

어린 아이들, 학생들도 알 수 있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이것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화이트칼라만 상대하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이런 용어를 해야 되는데……

홍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면 뭐합니까? 이런 스튜어드십 코드,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찾아봐야 되고, 커뮤니티케어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이런 말이 얼마나 알아듣기 쉽습니까? 윈스트라이크 아웃제 꼭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용어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다음번 우리 복지부에서 보고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된 것을 홍보를 할 때 정말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서 홍보를 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좀 국민들이 쉽게, 국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용어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강립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보고라서 아마 상세하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보고한 대로 꼭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수 예, 김승희 위원님.

○김승희 위원 오후에 제가 질의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자료가 지금 제출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야당이 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아서,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자료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 물론 중점 추진과제로도 오늘 김강립 실장님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기업 당

사자들은 이것을 많이 반대하고 있고 그 이유는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재벌 길들이기 수단이다, 기업 길들이기 수단이다, 또 연금 관치주의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보이는 정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채용과 인사 권한이 없는 청와대의 장하성 실장의 기금운용본부장 인사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7월 4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2주 동안 주요 일간지, 언론에 거의 톱뉴스로 장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마지막에……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이 ‘공공기관의 기금이 사,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대통령 임명 권한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 검증하는 것은 복지부 행정응원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청와대 행정응원을 요청한 일시, 방법, 요청자, 요청상대자 즉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나 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후보자 인사 검증 서류를 받아서 정부메일로 비서실에 송부했다. 비서실은 복지부에 가부 여부만 통보한다’ 이렇게 내용이 왔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왔거든요.

그런데 자료 요구에 대한…… 그 외에도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왔는데, 저도 간단하게 핵심만…… 다시 자료 요구인데 금방 제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해서 복지부가 후보자로부터 입수한 자료의 종류와 그 범위, 입수 경로, 그리고 후보자, 물론 채용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 후보자로부터 직접 복지부가 서류를 받아서 청와대에다가 제출을 했는지 아니면 공단을 통해서 받았는지 그 여부를 간략한 거니까 제출을 해 주시면 오후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관련 부처의 자료 제출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료 제출이 좀 되도록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늦거나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기동민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

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기동민 위원 업무보고 자료 27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양코르라이프캠퍼스 지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해숙 위원님하고 똑같은 문제 제기인데, 단시간 내에 이렇게 생경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좀 어려운……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들에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까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정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당장 오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위원장 이명수 말씀 감사하고요.

다른 말씀 없으시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 전 직원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질환, 손상에 대한 조사·감시·연구의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염병 위기에 24시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대응체계를 만들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 분석, 즉각대응팀 및 긴급상황실을 운영하고 원인불명 질병 대응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원헬스 개념의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감염사고와 같은 의료관련감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생아 중환자실 감시체계 도입, 감염관리지침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을 금년부터는 초등학생까지 확대 실시하고 백신수급 안정화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결핵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제2기 결핵관리 종합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결핵 발생률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건강·영양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분석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정책의 근거 기반을 마련하고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보건의료 연구기관으로서 신종 감염병, 치매 예방관리 및 유전체 연구 등을 실시하고 보건 의료연구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보고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부 8센터를 두고 있으며 국립보건연구원과 13개 국립검역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총정원은 845명으로 본부가 288명, 국립보건연구원 123명, 국립검역소 434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7334억 원으로 주요 예산은 국가예방접종사업 3421억 원, 감염병관리 예산, R&D 예산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감염병 관리대책 강화입니다.

지난 6월 수립한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백신 수급 안정화계획, 의료관련감염대책 세부이행계획, 인수공통감염병 종합계획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협력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인수공통감염병 등 관계부처 공동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24시간 긴급상황실을 운영하고 감염병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등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메르스, 에볼라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호남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29개 병원으로 확대하고 항바이러스제 등 비축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해외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항만 검역을 실시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정보를 연계하여 입국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원인불명 질병에 대해서는 중앙역학조사반에 상시대기체계를 갖추고 신속한 상황 보고와 위험

평가를 거쳐 긴급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신속·정확하게 원인병원체를 규명하기 위해 출혈열·발진 증후군 등에 대한 신속검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역학조사 실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금년에 9개까지 확대하여 설치·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료관련감염 및 항생제내성 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6월에 수립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의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감염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94개소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지침 배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사로 인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사 실무 시에 감염예방수칙 활용도구를 정비하고 손 씻기 등 의료감염 예방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항생제내성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지원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여 감염 전문가가 없는 1차·2차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에 우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감염병 퇴치를 위한 예방접종 기반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초등학교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확대하고 향후 임신부, 중·고등학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시에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접종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미접종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높은 수입의존도와 불안정한 백신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총량구매, 장기계약, 비축 등 백신 수급 안정화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백신의 국내 자급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고위험·신변중 감염병 4종에 대해서는 백신을 개발하고 국내 자급화가 필요한 백신에 대해서는 후보물질 확보 및 민간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선제적 결핵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2022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제2기 결핵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외국인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결핵과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실시하고 민간·공공 협력을 통해 환자의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결핵진단제 및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범부처 대응체계 강화 등 다각도의 결핵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등 집단시설 근무자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지속 실시하고 2020년까지 BCG 백신 국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 전담자를 배치해서 환자 개인별 복약지도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간병비를 지원하고 결핵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여 의료기관 결핵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만성질환 및 희귀질환 지원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강정보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눈건강, 난청 등 삶의 질에 직결되는 조사를 신규로 도입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에는 치매, 수면의 질 등과 같은 정신건강 관련 조사를 보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폭염, 한파,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시하고 예방수칙 홍보 등 예방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을 지정·공고하고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고 유전진단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가보건의료 핵심연구 강화입니다.

SFTS, 메르스 등 신변종 감염병에 대해 치료제, 백신 후보물질 개발 등 연구를 수행하고 사람-동물-환경의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연구를 위하여 다부처 협의체를 통해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치매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치매에 특화된 뇌조직은행을 운영하고 치매 발병 조기예측 및 진단지표 개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의 역학·유전체 연

구를 지원하기 위해 유전체 정보, 코호트 정보, 인체자원 제공을 확대하고 임상시험용 줄기세포 원료 및 치료제의 생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의 의결 시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병 개요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의 질병 부담은 건강보험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71만여 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으며 14만여 명의 환자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의 의료비용은 2017년에 851억 원으로 매년 6~10%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허가된 백신은 수입 백신 1종, 국내 제조 백신 1종이 있습니다. 백신의 예방효과는 연령에 따라서 50~60% 정도를 예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발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접종을 도입할 경우의 소요 재정을 추정한 결과 65세 이상 전체 인구를 접종할 경우에는 5000~7000억 정도가 소요되며 65세가 되는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400~6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으로 사전예방이 가능하고 항바이러스제의 치료로 조기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방안은 이러한 질병 및 백신의 특성, 지원 대상자의 우선순위 그리고 비용효과분석 그리고 의견수렴과 재정협의 등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본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정은경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메르스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때 함께 걱정하고 또 부족하다고 했던 사항이 얼마나 보완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질병관리의 중요한 부서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구요.

○전혜숙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전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

요.

○전혜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중환자실과 항생제내성 종합계획에서 항생제 다제내성 슈퍼박테리아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 그때 여기에 대해 중점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관리를 하는 지표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못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것에 대한 보고가 없네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그때 항생제내성 종합계획에는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대표지표하고 세부지표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혜숙 위원 그것에 대한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게, 거기에 대한 보고가 지금 빠져 있어요.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 굉장히 중점적으로…… 중환자실 가서 또 다른 병이 생기고 하는데 지표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저희가 지표가 있는데 충분치가 않아서 지표에 대한 것을 좀 더……

○전혜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여기 보고에 빠졌는데 그것 보강해서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다른 위원님 뭐 특별한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롭게 보건복지위원회에 오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30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공단은 국민의 행복한 노후와 복지증진 그리고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와 국민연금공단의 전 직원은 국민이 주인인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공단은 실무적 지원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저희들의 노력을 잘 지켜봐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 또는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등 향후 공단 경영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의 임원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배 기획이사입니다.

김용국 연금이사입니다.

나영희 복지이사입니다.

이수철 기금이사직무대리입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입니다.

(임원 및 간부 인사)

이하 간부진 소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해 드린 참석자 명단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의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성과 및 추진 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쪽, 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입니다.

저희 공단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 1999년 전 국민 연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공단은 본연의 업무에 더하여 장애인복지사업과 기초연금사업 등을 지원하고 최근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쪽, 조직과 예산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본부에 13실 1단 1센터, 기금운용본부 등을 두고 있으며 전국에 109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총 6966명이며 직원의 구성 비율은 남성 46%, 여성 54%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은 21조 8807억 원으로 이 중 연금급여비 지출이 97%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공단 관리운영에 2010년 이후 매년 100억 원만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 주요 경영지표의 현황은 주요 업무성과 및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업무성과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연금제도 운영 분야입니다.

9쪽입니다.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가입자 2186만 명, 소득신고자 1821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개선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체계적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영세 소기업의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 소득자료 등 공적자료와 연계한 가입 추진과 함께 노후준비 상담을 통한 자발적 가입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급자 맞춤형 연금급여서비스 제공입니다.

수급자 456만 명에게 매월 1조 7000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62세 이상의 국민 중 41.4%가 연금을 받고 있으며 향후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의 중추 역할을 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시스템 연계와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청구 안내 등 충분한 연금정보 제공으로 국민연금의 수급 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급여 지급과 빈틈없는 수급권 관리를 위해 지급결정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시스템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초연금제도 운영지원 내실화입니다.

약 499만 명의 어르신께서 월 최대 20만 9000 원을 수급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수급자 선정 기준액 인상 등으로 수급자 확대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공단은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집중 안내하고 방문이 어려운 분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기금운용 분야입니다.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기금은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다변화와 운용전략 고도화 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대체투자의 세부자산별 특성을 반영한 자산배분 체계 마련 등 운용전략의 고도화와 함께 해외사무소의 투자기능 확대를 위한 세부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또한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금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중심의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리스크 관리 고도화입니다.

해외 및 대체 투자 확대에 위험요인이 늘어나고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기업의 총체적 상환능력을 반영한 통합익스포저 한도관리체계 구축과 사전 리스크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해외 투자 위험관리 고도화를 위해 헤지펀드 투자위험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자산군별 통합 성과 분석 방법 마련 및 성과측정 방법과 절차를 문서화한 성과평가지침 제정 등 성과분석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운용지원 인프라 강화입니다.

글로벌 톱 3 운용기관으로 기금 1000조 시대에 대비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 개편과 전문성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운용직의 보수 수준을 시장 상위 25%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투자자산에 대한 세무정보 토털 관리시스템 구축과 해외투자 수탁 프로세스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 선진 투자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복지서비스 분야입니다.

공단은 2008년 노후준비 서비스 시행 후 전 국민 상대로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중추기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년기 진입 직전 세대인 50~64세 신중년분들에게 체계적인 노후준비와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을 위해 16

개의 연계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고 공공과 민간의 우수한 퇴직 전문인력을 강사로 선발하여 교육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진단과 상담뿐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 제고입니다.

공단은 30년간의 장애심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심사의 정확성 제고 및 장애인의 심사 불편 해소를 위해 장애등록과 장애연금 간 심사결과 일관성 검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유관기관을 통한 자료 확보로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각지대 해소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과 협업을 강화하고 보장시설 입소 등을 할 경우 활동지원은 중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능력 평가기준 개선과 자활현장 전학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역량 강화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관 운영 분야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연금 등 기관 운영의 다섯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경영성과와 정책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국민과 직원이 기획부터 집행까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혁신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사 공동위원회를 신설하여 경영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기퇴근제 도입 등으로 일과 생활의 양립을 선도하고 개선이 필요한 업무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근무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ICT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입니다.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바일 앱을 활용한 고객 서비스 확대, AI 기반의 챗봇을 활용한 24시간 서비스 제공 등 스마트 ICT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문자인식 기술을 적용한 웹팩스 자동처리시스템 도입과 행정용 모바일 오피스 구축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공단의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현안입니다.

21쪽입니다.

공단은 지난 30년 동안에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운영비도 증가하고 있으나 초기 전액 지원에서 현재는 대폭 축소된 매년 100억 원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운영비의 적정한 국고지원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법에 국고지원 비율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22쪽,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처우 개선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25년경 1000조 원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투자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인재 확보가 매우 절실한 시기에 공단은 많은 인력들을 채용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처우 개선이 어려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운용직에 대한 처우 개선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세계 3대 연기금 위상에 걸맞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시장 평균의 상위 25%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2019년도에 운용직 인건비 109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치입니다.

현재 경력직 운용인력 채용 방식으로는 급속히 증가하는 기금의 운용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서 자체 인력 양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로벌 연기금 기관들도 자체 인재양성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연기금 운용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보건복지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나 법제사법위 심의과정에서 교육부 협의 필요를 이유로 계류되어 현재 교육부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인 주요 통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김순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수**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순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여러 행정부처에서 지금 보고하신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방금 국민연금공단 보고 내용과 연관되어서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께 제가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장 채용 논란이 많이 요새 언론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의 회신이 매우 늦고 있고 아까 김승희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자료나 이런 것들의 보고가 굉장히 부실한 자료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께서도 전직 국회의원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런 자료의 귀중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 놀랍게도 지난 7월 초에 국민연금 이사장이 국회 자료 제출을 직접 통제한다는 그런 말들이 내부 직원의 입에서 단속되지 않고 본 의원실로 담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참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이것이 마치 강도 높은 사전 검열, 그런 검토를 통해 가지고 자료 제출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마저도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도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실한 자료의 제출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얼마 전 김성주 이사장께서는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관련해서 기자간담회 약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해 놓고는 특정 매체의 인터뷰를 미리 하여서 기자들과의 약속을 어긴 바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로서 즉시 7월 9일 자 사과문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언론에 정성과 공을 들이는 것만큼 국회와의 협업과 협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가을철에 국정감사가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고 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부처에서 뚜렷한 확고한 자료의 제출이 없이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의 국정감사를 완수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서는 국민연금 이사장께서 국회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성의를 보이고 균형감이 있는 소통의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셔야만 우리가 어떤 실속을 기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그런 국회 의정활동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서서는 아주 심대한 당부의 말씀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앞서 김승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는데 지금 김순례 위원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답변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김순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19대 보건복지위 활동을 통해서 정부 측의 자료 제출이 불성실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국회에 관련된 자료는 신속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요청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주로 개인의 신상정보라든가 민감한 투자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나머지 정책적 사안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혹여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된 자료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주실 수 있나요?

○**김순례 위원** 아니요. 내용상에 우리가 점점을 할 때 보통 알고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상이하계, 보편적으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그 정보를 접하거나 이런 부분에서의 부실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료가 제출이 되고, 자료 제출이 안 될 경우에는 안 되는 사유와 그런 부분을 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미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위원장 이명수** 다시 뭐 말씀하실 건가요, 김

승희 위원님?

○**김승희 위원** 방금 전에 김성주 이사장님께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나 또는 투자사항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김순례 위원님의 지적에 의하면 직원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제출에 대해서 응대를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좀 가슴 깊이 새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기동민 위원님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동민 위원** 그냥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이명수** 말씀하세요.

○**기동민 위원**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아니면 다른 상임위 쳐다보면서, 청문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단상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것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위원들의 질의가 주된 목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보건복지 업무 전체에 대한 통찰을 한번 해보자는 것인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청, 질의성 질문,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다 보니까 막상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뒤로 밀리거나 지루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서는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의 질의가 빨리 속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성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명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보고라서 좀 상세하게, 전에 계시던 분도 계시지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보고가 되도록 제가 별다른 통제를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위원님들 질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보

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보고하는 방법, 요령도 좀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김명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김명연 위원** 야당 간사로서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개원되고 나면 상임위원회가 바뀝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했던 분들은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또 기 진행됐던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알고 할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회가 바뀌고 그러면 집행부 간부들도 다 바뀌고 또 새롭게 업무 파악을 하려면 보좌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첫날부터 자료가 부족해서, 자료 제출하는 것이 불성실해서 의사진행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은 집행부로서 반성하고 특히 뒤에 있는 간부님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위원들의 질의서는 집행부의 자료가 근거가 되어야지 거기에서 완벽한 질의가 나오는 것이고 대안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질의하기 전에 자료 보고가 얼마나 불성실하면 이렇게 첫날부터 자료 요구에 대한 질책이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반성들 하시고 앞으로 자료 요구에 철저히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명연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답변 시간 포함해서 1차 질의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못 다하신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장관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보시면서 가장 보건복지부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이 최근의 동두천 어린이집 등원차량 사건과 또 이어지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복지부장관님의 말씀을 아

마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두천 어린이집 등원차량 사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터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얼마 전에, 이번 달이지요. 7월 초에 외할아버지가 손자를 차에 태우고 깜빡 잊어버리고 나서 아이가 사망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지요. 아마 여름에는 가끔 이런 사건들이 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를 태워서 등원시키는 차량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사건이 터지면 당연히 복지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긴장을 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냥 이 사건만을 놓고 보면 운전기사 그리고 동승했던 동승 책임자 그리고 담임교사, 원장, 이 네 사람이 다 사실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났고, 그리고 복지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불행한 사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뭔가 지침을 내려 보내거나 경고를 주거나 하는 그런 게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복지부에서는 이런…… 하나도 없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규정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중 삼중으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규정의 준수 여부를……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중 삼중의 규정이 있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전기사, 동승자, 담임교사, 원장, 이 네 사람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건데 확인 안 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상희 위원 올해는 유난히 폭염도 정말 무서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예상되는 사건과 관련해서 적어도 중앙의 복지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이 관리책임 있는 기관에서는 지금 이런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이 국민들 관심 아닙니까? 적어도 올여름에 이 외할아버지 사건이 벌어진 이후라도 다 점검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희도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그래서 다시 잠자는 아이 확인하는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도에서 하나가 추가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된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잘 작동이 될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하나씩 하나씩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작동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복지부가 국민들께 사과하고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대책은 정말 분통 터지는 노릇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2013년 202건에서부터 시작해서 2017년 776건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번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지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진 건데 매년 2013년부터 2015년 그리고 올해까지 대책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벌수위를 높이고 또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이런 수준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을 보면 이번에 나온 예방대책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걱정이 드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통학차량에서 발생한 안전사고하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학대 사건, 그 두 가지 일이 거의 동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도, 그런 두 종류의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떻게 보면 달리 원인이 있지만 또 크게 보면 하나로 묶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이미 있고 또 그 대책에 대해서 이중 삼중으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자질 향상이라든지 또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시정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점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연말까지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보면 보육교사들의 자질이 라든가 근로 여건이라든가 저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40%까지 우리가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과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런 관리감독과 또 기존에 있는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도 저는 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부분을 좀 더 목표를 높여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 목표는 일단 40%인데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립보육 비율을 높이는 것도 한 수단은 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상희 위원님 어린이 안전에 대한 강조말씀 감사합니다.

참자는 아이 확인장치가 권고사항인가요, 의무화하는 건가요? 또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건지, 어린이집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도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장 이명수**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 장관님, 이번에 어린이집 사고 이후에 복지부에서 문책성 인사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에서 문책성 인사는 없었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 해당 지자체에서는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것은……

○**김명연 위원** 확인 안 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니요.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이라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아마……

○**김명연 위원** 그러면 대기발령…… 경찰 수사는 그 사고에 관련된 수사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명연 위원** 그러나 이 관리감독 체계가 누구한테 있어요? 지자체에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 위원** 서울 화곡동 사고도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명연 위원** 통학버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질식사를 시키고 이런 일이 과거에 함양군에서도 11년도에 있었고 14년도에도 천안에서 있었고. 이런 일이 생기면 담당자를 문책성 인사를 강하게 해 보세요. 자기자리 보전하려고 늘 관리감독을 합니다. 이것은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단속을 해야지요, 담당자가. 앉아 가지고 규제만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나가서 단속하고 하는 것들을 안 하고, 자기 인사상 불이익이 없으니까 이게……

먼저 RFID 시범사업 정부에서 했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했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 결과 하고 나서 1년 만에 종료시켰지요,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명연 위원** 그때 왜 종료시켰어요? 기술 부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게 실효성이……

○**김명연 위원** 그 당시에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지금 3~4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다른 대안을 갖고 제도를 찾았는지, 아니면 기술력 부족으로 한 것을 기술을 보완해서 RFID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은 했는지, 이 중에서 그것 확인한 사람 누구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두 가지 새로운 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RFID도 같이 새로운 기술력 동원해서……

○**김명연 위원** 41억 들여서 1년 하고 사업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이 계속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과기부가 그 두 가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계를 사용을 해서.

○**김명연 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올 연말까지 나오니다.

○**김명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사업예산 확정이 되면 사업예산 다 확보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 깔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자는 아이 확인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다 깔 계획이고요. 추가적

으로 RFID도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김명연 위원** 벌써 3년인가 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담당이 바뀌더라도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 뭘 추궁을 해야 되냐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이것을 추궁해서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인사 조치를 하세요. 그러면 무서워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공단 김성주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명연 위원**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평소 의원 시절에도 꽤 강조를 하셨고 전문성을 강조했고 또 전주 이전을 강하게 주장을 하셨던 분인데, 지금 거기에 1년째 수장이 없어요. 전문성은 둘째 치고 1년 동안 공적으로 놓고 또 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임명되신 지가 얼마 안 되고, 635조 원이라는 기금을 관리하는 정부로서는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기금운용본부장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저도 참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명연 위원** 수입해 와야 됩니까? 왜 못 찾는 거예요? 전문가를 찾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것들을 같이 인식하고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코드 인사를 찾는데 실력도 있고 그것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 찾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 전문가라도 스카우트해서 이것을 맡겨야지요. 635조를 본부장 없이 운용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CEO가 없으면 무너지는 판인데 국민들이 연체 안 해 주고 열심히 연기금을 내 주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지……

운용본부장이 없어요. 본부장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왜 못 찾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금융 전문가들이 그렇게 없어요? 왜 안 됩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제가 작년 11월 7일 날 취임했고 그다음에 기금본부장이 그보다 앞선 7월 달에 사임을 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일단 전반적인 조직의 안정을 직무대리 중심으로 이끌었고 2월 달에 저희가 공모에 들어간 겁니다.

○**김명연 위원** 조직을 안정화시켰다고 하는데 2년 동안 그만둔 사람이 62명이에요, 거기에서. 저희가 처음에 전주 이전할 때 ‘너무 외지로 빼놓으면 전체적으로 조직이 동요할 거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또 특히 민간 투자사보다 페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올해 예산 덜 설정해 갖고 성과급도 나눠서 준다고. 세상에 성과급을 갖다가 잘했다고 격려금 주는 건데 그것을 나눠서 주겠다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회사에 누가 다니겠어요?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데……

공채 경쟁률도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역대 최저, 7 대 1이 최저 경쟁률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5.3 대 1이에요. 지금 일자리 때문에 난리인데 이렇게 좋은 직장이 역대 최저 경쟁률 7.1보다 낮은 5.3 대 1로 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지요.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왜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원 안 할까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이유야 많지요. 많은데 그 이유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유능한 인재들이 몰리고 목표로 했던 사람들이 20명이면 20명이 다 채워지고 그 사람들이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이것을 갖다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본 공단의 이사장이고 또 기금운용본부장의 일이고 그 외에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임무예요.

올해 공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53%, 38명이 필요했는데 20명 왔어요. 공채에서 53%, 다른 데는 밀려서 난리인데 53% 채용됐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마무리 짓고 다음 2차 질의 하겠는데……

해외대체실장 여기도 7월 1일, 작년부터 1년이 넘도록 지금 공석이에요. 그다음에 주식운용실장, 해외증권실장도 올해 6월, 7월에 또 그만뒀어요.

8개 실 중에서 3개 실 수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본부장 플러스. 그리고 팀장급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주식운용실 위탁투자팀장, 대체투자실 실무투자팀장, 뉴욕사무소 소장이 공석이에요.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쭉 공석이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그동안의 기금운용본부와 지금 많은 차이가 생겼다는 거지요.

답변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김명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에 기금본부장, CIO를 새로 선임하지 못한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난 2월부터 공모에 들어가서 새로운 후보를 선정했어야 되는데 여러 문제로 인해서 못한 상태이고 현재 재공모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책임자를 뽑도록 할 것이고요.

운용실장 공석 부분은 이사장이 인사권이 없습니다. 새로운 CIO가 왔을 때, 새로운 진용을 짤 때 임명되도록 하거나 외부에서 공모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려 중입니다.

그리고 운용역들 이탈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쪽의 자산운용사들이 이직률이 심합니다. 평균 10% 안팎이고요.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은 일반 민간시장보다는 이직률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전주 이전 전후로 이직률이 조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26명을 채용했고 올해 상반기에 20명을 채용했고 하반기에 34명을 채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연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지금 말씀한 대로 이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장관님, 중요한 장애인정책국장 그다음에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이 간부 소개에서 빠졌거든요.

지금 공석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장 이명수 이것도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 2주 정도 됩니다, 장애인국장은.

○위원장 이명수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장 이명수 지금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이

나 기관에 일하는 분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로드가 많다, 과중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55명 부족해요. 질병관리본부도 보니까 77명이 부족하거든요.

현원이 많이 부족한 게 특별히 현장업무라 그런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인원이 많이 비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많이 가 가지고 그 자리를 대체인력으로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휴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육아휴직 당연히 해야 되고 꼭 필요한데 그럴 경우 대체인력이나 관리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다음은 존경하는 바른미래당의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의원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장관님께서 축사도 보내 주셨던데, 논의된 내용을 보고받으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최도자 위원 의료현장에서 마주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자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는데 장관님이 계셨으면 도움이 더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장의 의료진들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행정절차와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중소병원에서는 엄두를 내기가 힘들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복지부가 행정절차와 서류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놔서 지키지도 못하는 공중에 뜬 법을 만들었다고 질책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대형병원이 아니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만 해 놓고 실제로는 이 제도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 시행 5개월 동안의 요양기관 종별 시행 비율을 알아봤는데 42개밖에 없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만 건이 넘는 전체의 59.2%가 시행되었고 종합병원은 36.8%, 병원은 3.7%, 요양병원은 0.3%만이 시행

되었습니다. 왼쪽의 등록기관 수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크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연명의료 결정을 위해서 서류를 참 많이 작성해야 합니다. 저것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애를 먹기도 하고 또한 업무와 관련된 수가도 너무 낮아서 의사들이 꺼린다고 합니다. 외국의 신청서류를 보면 한 페이지에 다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 물론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 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당장 외국처럼 한 장으로 행정서류를 줄이기는 어렵더라도 복잡한 절차들을 조정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도 현장의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것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만들어 주신 법이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생명권에 관련된 결정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보다 쉽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전산입력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쉽게 뗄 수 있도록 그것도 해 보겠고요.

그리고 수가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데 시범사업이 끝나고 난 뒤 본사업을 할 때는 제대로 된 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행정절차도 문제지만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 동의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사 하나를 발췌해 왔습니다.

의료현장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점은 가족 전원의 동의를 통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기사를 하나 더 보시지요.

환자가족 전원 합의 시 환자가족 수는 1~4명이 76.4%, 5~9명이 22.9%, 10명 이상이 0.7%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할아버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서 17명이 모인 사례가 있었으며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실행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환자가족의 범위를 1촌 이내 직계비존속으로 한정하고 없을 경우에는 2촌 이내 형제자매 등으로 넓히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토론회에서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도 대부분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토론회에 참석한 환자단체 대표께서는 이 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장관님께서 개정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빨리 법이 개정돼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보다 쉽게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 연명의료결정법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와 진통 끝에 시작이 된 제도이고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 안에서 잘 정착시켜야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좋은 취지로 마련된 이 법이 현장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 과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행정 간소화는 최대한 하겠고 또 법에 규정되어 있는 좀 불필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개정법을 통해서 추진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정부 검토 내용을 좀 충실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최도자 위원님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토론회도 개최해 주셨는데 지속적인 관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일을 하면서 관계부처 공무원들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자료 제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료 제출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현안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회 열리면 국회 열리는 동안

만 신경을 쓸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제기하면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실천적 답을 주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사실 이야기를 해 왔던 문제인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뺨을 때리는 CCTV가 공개된 이후에 상당히 문제가 되면서 결국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했었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당시에는 CCTV 설치만이 아니라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배치 문제까지 같이해서 대책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CCTV를 설치하고 나서 과연 그러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러 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2016년 국감 때 CCTV 열람 관련 내용 자료를 요구했더니 정부에서는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러면 작년 국감에서는 정부가 전혀 자료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서 CCTV 열람 내역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시다. 그때 받아 봤더니…… 2015년에서 2017년, 한 2년에 걸친 열람 관련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왜 상시관리 안 하십니까, 복지부에서? 이것 관리하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방안도 제시를 했어요. 상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육포털에다가 CCTV 열람 관련 항목 하나만 만들면 복지부가 체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CCTV를 해 놓고 관리를 안 해요. 이런 정책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면 제대로 관리도 하고, CCTV 설치 의무화를 했으면 그 이후에 그러면 뭐가 달라졌는지 아니면 열람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제가 이 이야기를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에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9개월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례의 경우에 CCTV 영상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이 그냥 벌금형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CCTV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이것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인데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시

관리 안 되는 것, 대책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CCTV에 대해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곧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제가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를 들면 전라남도는 16건, 경기도는 2800건, 열람의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리도 없고 감독도 없으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CCTV를 유일한 대안으로 그때 제기를 해서 정부가 만들었으면 이것 관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열람과 관련해서도 매뉴얼이 다 틀려요. 어떤 데는 서류를 작성해서 보여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어디는 경찰을 대동해야 보여 주고, 다 틀립니다. 관리가 안 되고 매뉴얼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열람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나 실태조사 이런 것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동의합니다.

○**남인순 위원**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CCTV 설치만이 아니라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여건 개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조교사 대폭 확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올해 추경을 해서 총 2만 5000명의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3만 9400개지요. 그러면 어린이집 하나당 한 명도 못 가는 겁니다, 이 숫자가.

그런데 이번에 사실 통학버스 사건의 경우도 담임교사가 참여수업 준비 때문에 아이가 오지 않은 것을 놓쳤다…… 물론 이것은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이 사고 이면에는 교사들의 어떤 과도한 노동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2담임제로 운영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남인순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조교사를 최소한 반별당 한 명씩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어린이집당 한 명이라도 채우든지……

이렇게 운영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뻔히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를 더 확충하자고 했는데, 물론 복지부도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조

교사 확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별로, 반별로 보조교사 투입하기 전이라도 우선은 어린이집에 모두 한 명씩이라도 배치하고 또 반별로 보조교사가 되어서 유치원처럼 2담임제로 운영이 되어야만 이런 사고가 예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런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저는 2담임제에 가까운 그런 보조교사의 확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장관님, 이번에 보육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거기에 지금 이미 그것 반영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이것 반영을 하고요 표준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반영을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지금 보육체계 개편 논의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시킨 보육체계 개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이사장님, 19대 때 동료 의원으로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국민연금 부분에 대해서 8월 달에 재계산을 해서 발표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남인순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서 2017년도 신규 가입자가 20년 내지 30년 동안 가입한 후에 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가정해서 월평균 지급예상액을 분석을 해 봤는데 A값 218만 원 기준으로 20년 가입 시에는 월 45만 원, 30년 가입 시에는 6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득대체율이 너무나 낮은 것이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수준으로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소득대체율 등을

비롯한 정책적인 문제는 최종적으로 국회가 결정하셔야 될 사안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보다 높은 노후소득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대체율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올렸을 경우에 그에 따르는 부담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핵심적 사안으로 생각하고요. 국회가 국민들과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끌어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남인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28년까지 0.5%씩 낮추도록 계획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45%라도 수준을 좀 멈추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논의를 통해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에 대해서 방향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 연금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이라든지 이후의 논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일단은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이지 저희가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역할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4차 재정추계와 동시에 제도발전위원회 등에서 3개 위원회가 복지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연구원에서 각 위원회 간사로 참여하면서 관련된 연구 자료들을 제출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는데요.

유재중 위원님, 지난번에 계시다가 새로 오셨는데 인사말씀 한번 주실까요.

○**柳在仲 위원** 생략하지요.

(웃음소리)

○**위원장 이명수** 다 말씀하셨는데……

○**柳在仲 위원** 괜히 부끄럽게 또 늦게 온 것을 그렇게 지적합니까?

○**위원장 이명수**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柳在仲 위원** 다 했습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는 부산 수영구 출신의 유재중 위원입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님,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에게 많이 배워 가면서 보건복지 상임위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명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찬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 정말 이 시간에 무더위 속에서도 애를 쓰시는 우리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많은 종사원들, 공직자들,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고요. 또 중간에 복지부장관님께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이 지금 1년 넘게 공석인 것 아까 동료 위원님 또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작년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7.28%였는데 올해에 1월부터 4월까지 0.89%로 내려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승희 위원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승희 위원 대답은 썩썩하게 잘 하시는데 이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연간 1% 떨어질 경우에 연금적립금 고갈 시기를 몇 년 앞당긴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추정마다 다른데……

○김승희 위원 제가 마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승희 위원 7년 앞당깁니다. 그런데 지금 5, 6% 고갈되는 거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금운용본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아닙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김승희 위원 아니지요? 아닙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사는 추천위원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승희 위원 복지부장관은 이사장의 제청을 받아서 승인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승희 위원 그런데 지난 7월 6일 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모 개시 전에 국민연금공단 고위 관계자한테 한 차례 연락이 왔다고 확대선 전 대표가, 물론 탈락한 분인데 그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모 이후에도 직접 찾아왔다’ 이렇게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의 고위 관계자가 공모가 나가기 전에 확대선 전 대표한테 연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글썬, 그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승희 위원 알지를 못하다니 부하 직원일 텐데, 이사장님 본인이거나 아니면 부하 직원일 텐데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합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글썬, 저는 사전에 후보들과 연락한 적이 없고요. 또 공모 시작 전에 어느 직원이 연락했는지는……

○김승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중앙일보 보도가 허위 사실입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글썬, 그것은 뭐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면 그 당사자를 증인으로 선택해서 물어봐도…… 물어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사장님이 참여를 하게 돼 있는데 참여하셨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입니다마는 제가 최종적으로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추천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입니다.

○김승희 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 안 하셨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 면접심사가 4월 3일 날 있었고 또 4월 말에 전주에서 광태선 전 대표를 오라고 해서 만나신 적이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광 전 대표와 통화를 몇 번 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4월 21일 날이고요, 전주에서 만난 게요. 그때가 처음입니다. 사전에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김승희 위원 통화한 적 없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승희 위원 만나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아무래도 제가 최종적으로 임명권자로서 후보들이 어떤 자질과 경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요. 과거에 미국 대학에서의 공부 과정이나 국내 운용업계에서의 활동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면 4월 21일 날 만났고 그 이후에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 이후에는 6월 초에 일단 인사 검증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김승희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이후에 전화한 적 있으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6월 초에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6월 초에 통화한 적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승희 위원 통화해서 ‘이사장님과 장 실장님은 계속 밀었는데 두 분이 아닌 윗선에서 탈락 지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분한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김승희 위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이게 기사 내용이에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글썄, 그분이 어떻게 언론에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은 얘기 나눈 적이 없습니다.

○김승희 위원 ‘저와 장 실장은 광 대표를 계속 밀었는데 제가 아닌 윗선에서 탈락 지시가 있었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었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없습니다.

○김승희 위원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이

고요.

또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 된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승희 위원 그리고 광 대표는 6월 초에 김성주 이사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6월 초였습니까, 이때 통화한 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행정응원에 대한 파이널 대답을 받은 게 언제냐 그랬더니 6월 20일이예요.

그러면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6월 20일 청와대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사검증에 이분이 탈락되어야 된다고 그 대답을 받기 전에 이미 아셨습니까, 이분이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김승희 위원 모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그런데 김성주 이사장님은 아셨어요. 6월 초에 광태선 전 대표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에 탈락됐다는 것을 말을 했다고 지금 방금 하셨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장관님은 6월 20일까지 몰랐다는 것은 이 인사 과정에 있어서 장관 패싱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장관님은 모르시고 김성주 이사장님과 청와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류가 있었고.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사실과 다릅니다.

○김승희 위원 왜 사실과 달라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6월 20일 날 저희는 복지부를 통해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적격 통보를 받았고요 그 일주일 후에 재공모를 시행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런데 6월 초에 통화를 했잖아요. 6월 초에 통화를 해서 광 전 대표한테…… 통화 안 하셨어요, 6월 초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6월 초에 통화한 내용은 자꾸 임명이 늦어지기 때문에, 검증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본인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면 그분이 탈락됐다는 그런 내용은 그때까지 모르신 거지요, 6월 초에? 몰랐

어요, 알았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 당시는 아무도, 어떤 결정사항도 없었고……

○김승희 위원 그러면 전주에 이분을 초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의논할 때 영국에 출장 같이 가자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공단의 간부급 실장이나 본부장을 임명할 때는 복수의 후보자를 상대로 제가 직접 다 면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승희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그때 영국 출장을 같이 가자는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러니까 기금이 사후보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만나서 그분들이 어떻게 일하려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희 위원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요, 출장을 같이 가자는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4월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 얘기는 제가 6월에 유럽 출장 계획이 있으니 임명이 된다면 한번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제안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복수의 후보 누구를 만나도 똑같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김승희 위원 인사권자가, 임명권자가 단독 지원한 후보를 만나 가지고 6월에 출장 계획이 있으니까 출장을 함께 갈 의향을 물어본다는 것은 그 당사자한테 이미 내정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것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월권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명수 말씀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위원님들께서도 보좌진 뽑을 때 직접 면접하고 물어보고 뽑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좌관이 된다 하면 어떻게 하겠

느냐고. 그러나 그것을 물었다고 해서 본인이 보좌관이 된다고 누구도 생각하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기조실장을 결정하기 전에 기조실장이 된다면 어떻게 일할 것이냐 묻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기금이사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기금 본부를 이끌어 갈 것인가 물어보는 게 당연하고, 만약에 된다면 이러이러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저는 그게 월권이나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승희 위원 공모가 나가기 전에 청와대의 장하성 실장으로부터 공모를 하라고 제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임명권자인 이사장이 출장 계획까지 상의를 하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제의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됐고 그리고……

○신동근 위원 추가질의하시지요.

○김승희 위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예, 추가질의 때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갑 맹성규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답변하는 자리에 있다가 오늘 질문하는 자리에 오니까 조금 낯설기는 한데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인데요. 정부는 지난 1월 23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재해. 그리고 향후 5년간 자살의 경우에는 30%, 교통사고하고 산재는 50%씩 사망자 수를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에 따라서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은 합동으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희들은 애초에 발표한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제가 나중에 국정감사 할 때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금 보완할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의 계획상으로.

첫째는 자살 유가족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책에 보면 자살 유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서비스 개발이 대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자살 유가족 통계가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자살에 대한 전수조사가 된 게 있기 때문에……

○맹성규 위원 아니, 유가족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유가족 모임을 전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맹성규 위원 보통 보면 유가족의 자살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8.3배가 높고 연간 한 8~10만 명 자살 유가족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통계조차 제대로 없습니다. 통계가 없는데 거기다가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서비스 개발,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지가 않거든요. 좀 더 보완한 대책을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자살자 통계에도 보면 복지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살자 이것도 역시 통계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고 그리고 관련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경찰, 자료 공유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은 있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이 지난 3년간 자살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살의 어떤 원인별·유형별 대처를 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이 말을 붙여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6개 분야 54개 추진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하고 유가족, 그다음에 통계에 대한 자료를 좀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맹성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발사르탄 파동인데요. 저도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누구도 저한테 연락을 해 준 적이 없어요.

오늘 제가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처방 대상이 17만 8000명인데 재처방 해 준 사람이 14만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82.2%이고 복용기간이 지난 사람 3.5% 포함하면 15%는 재처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못 받았어요. 다행히 저처럼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약을 먹은 사람은 제외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장관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15% 남은 분들이 연락을 못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도 가지고 있는 명단을 다 파악을 해서 연락이 가능하면 다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락을 받고도 그 15%에 해당하는 분들은 재처방에 응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맹성규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15% 자체가 연락이 아예 안 왔습니다. 연락이 아예 안 왔다고요. 장관님이 뭐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연락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금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는 거라고. 여기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까.

그리고 발사르탄 사태 관련해서 또 하나 쟁점이, 이게 한 성분으로 100개 이상 다른 의약품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주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 그러면 건강보험재정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맹성규 위원 발사르탄처럼 하나의 약품 원료를 가지고 100개 이상의 약품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것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별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하나의 원료를 여러 약제에 쓸 수 있는 것은 막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원료가 어느 약제에 사용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식약처에서는 지금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맹성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약이 관리하고 건강보험재정에 관한 문제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발사르탄 사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연락을 못 받은 문제, 그리고 약값 이게 건강보험에서 너무 지나치게 보호를, 어떻게 보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강보험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말씀하신 게 혹시 의약품 목록을 정비하자는……

○**맹성규 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것은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맹성규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좀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담, 그리고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부담은 사회가 같이 보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항목 중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시설입소아동 퇴소 지원입니다.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부가 손을 거의 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입소아동 퇴소 지원 그다음에 발달장애아 지원, 여기는 또 뭐가 걸리느냐 하면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도 교육부 소관이라고 손을 떼고 있다고, 복지부가. 그런데 결국에는 발달장애인, 이게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발달장애아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보거나 아니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가 됐든 복지부가 됐든 중요한 사항이 아니지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시설입소아동 퇴소, 그다음에 아까 식약처에서 말씀하신 희귀질환자 보호하는 문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사회가 더 보듬어야 될 어떤 항목, 사항 이런 것을 제가 다음 국감 때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발달장애인, 그다음에 시설입소아동 퇴소 지원, 희귀질환자 보호 문제를 좀 세세하게 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점까지 보완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맹성규 위원님 오늘 첫 질의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 구석에 앉아서 가지고 나하고 눈이 좀 맞아야 되는데……

위원님들, 협조해 주세요. 여기 좀 이렇게 비켜

주세요.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질병관리본부장님께서 결핵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전 세계 1위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김순례 위원** OECD 국가 중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2위와의 차이가…… 10만 명당 77명, 2위 라트비아 여기는 37명, 무려 40명이 더 아주 고공을 달리는 그런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종사하는 이런 의료인들 중 6명 중에 1명꼴로 잠복결핵이라는 것이 국내 학술지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많은 대안 제시를 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한 기업에서 같이 근무를 하던 중에 결핵 보균자로 판명이 된 직원이 확진을 받기 전까지 폐쇄된 공간에서 같이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확진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병원으로 통보가 되고 병원에서 보건소로 가고 보건소는 노동부 쪽에, 그 지역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던 동료에 의해서 결핵 감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업주는 그 어떠한 대책과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고, 확진이 되면서 그에 따른 행정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제보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본 위원은 민간기업에서 사업주가 결핵환자에게 업무를 일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결핵예방법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서 나오는 업무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보면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제성과 규제성이 없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결핵이 아주 첫째 중요한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결핵환자의 동료 직원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다 해서 그 발원자

인, 개연성을 갖고 있는 A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 제공도 없었고, 그러면서 사업주는 결핵환자에 따른 격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벌과금은 결국은 한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나 자사에서 이렇게 결핵환자가 일어났다는 오명을 가리기 위해서 사업주들은 이것을 거의 공지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현장의 결과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이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업장 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이런 것도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를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무작정 국가적인 방역체계에서의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그 입장에서 노동부 쪽에…… 집체된 공동시설 내에서 환기가 되지 않고 이런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약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문제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 제시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이게 영역이 노동은 노동에 관계된 노동부의 관련법 또 보건에 관련된 것은 복지부장관 휘하 여러 관련 단체의…… 장관님, 잘 들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순례 위원 업무 간에 부처의 상호 연계성과 협조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또 그 이하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관리본부대로 되다 보니 보건소에서 사업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게 구속성과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산하 보건소만의 어떤 역학적인 지정과 행정명령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의 노동청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발생된 그 업장을 함께 방문해서 보건소와 공히 공조를 한다면 훨씬 부가적인 가치, 활약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 예로 보건소와 근로감독관이 동행 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결핵검사, 같이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결핵검사 그리고 즉각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통기가 된다고 아니면 동쪽 방향에 해가 들어

와야 된다, 이런 약간의 절차상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이행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선행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보통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하고 경찰관이 대동해서 현장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동을 할 수 있는 연동적인 시스템을 성립시켜 준다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결핵 예후성, 잠재성 결핵 이런 것과 더불어서 공동 영역의 장에서 근무하는 어떤 사업장 내에서의 이것도 훨씬 예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위원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장에 나가서 역학조사 하는 데 굉장히 제약이 많았는데 고용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요. 또 지역 단위에서도 노동 관할부서하고 보건소가 협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구축해 보십시오. 제가 다음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좀 예민하게 파고들려고 하니까 대안 제시하고요.

김성주 이사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앞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문책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주최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에 대해서 있었지요? 여기에 참석하셨나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아니요,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순례 위원 매우 의아합니다. 이 스튜어드십의 관련 부처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관장해야 할 아주 특정 사안인데 여기에 안 가셨던 일에 대해서 되게 이해할 수 없어요.

본 의원실에서 보좌관들을 보냈었는데 그 당시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곳이 보건복지부입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현재 국민연금법 상으로는 기금의 관리·운용의 주체는 복지부장관입니다.

○**김순례 위원** 물론 복지부장관이지만 스튜어드십을 취임 후 바로, 작년 11월부터 주장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관련된 사무 아닌가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대로 방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최종적으로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도입을 결정하면 그것에 따라 저희는 기금본부에서 적용·집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순례 위원** 적용·집행하고 이 부분에 대한…… 기금운용이사 같은 경우에도 준공무원에 대해서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면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순례 위원** 김성주 이사장님께서 해당에 가장 아주 접근되어 있는 최종결정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관치가 되지 않느냐 우려를 하고 있는 스튜어드십에 관련된 공청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소관 부처에서 가장 관련자가 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기금본부하고 우리 공단의 직원들이 많이 참석했구요. 관련된 보고를 그다음 날 기금본부의 운용전략실장으로부터 상세히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금운용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이라든지 실행은 기금운용본부에서 하고 또 그것을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지만 제도에 대한 설계라든지 지침 받는 자체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금국장이 주관을 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다음에 2차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예, 그러시지요.

김순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 소속은 바른미래당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위원입니다.

다.

박능후 장관님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운용 과정에서 손실을 입어도 제대로 된 주주권도 행사하지 못해 왔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너들이 온갖 불법·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주가가 폭락했지요.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 평가손실이 지금 현재 18년 7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장관님께서서는 평가손실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마는 대략 개요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이 투자한 액이 그런 파동이 있기 전에 한 3800억 정도 투자되어 있었고요. 그게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파동 전후로 해서 주가가 한 15% 정도 빠졌기 때문에 대략 4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대한항공, 한진칼, 주식회사 한진, 3개 관계사에서 약 1430억, 2018년 7월 23일 종가 기준입니다.

장관님, 주주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투자한 지분만큼 목소리를 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겠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그런데 그동안 국민연금이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기업들 거수기 노릇만 해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보겠다 하는 뜻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시는 거지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장정숙 위원** 아니, 일정 기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 문제인 대통령 공약사항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맞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 문제인 대통령의 공약사항보다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훨씬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현재 이 자리

에서 재벌들 환호성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재계 압박에 혹시 복지부가 굴복하신 것은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정숙 위원 전혀 아니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전혀 아닙니다.

○장정숙 위원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님, 지난 6월에 기금운용본부장 조인식 대행 명의로 대한항공에 공개서신 보낸 적 있으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렇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때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서신 내용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장정숙 위원 ‘귀사의 무궁한 발전 기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3월 말 기준으로 귀사의 주식을 1194만 7280주를 보유한 주주다’.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장정숙 위원 ‘최근 귀사의 경영진과 관련해서 여러 국가기관의 조사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 및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사료가 돼서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의 주주로서—2대 주주지요. 12.5% 갖고 있습니다—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귀사의 입장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은 상기 사항에 대해서 귀사의 입장과 그 입장을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요청한다’ 그랬는데 그 근거 자료는 받으셨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 서한은 2월 달에 비공개 서신을 저희가 발송한 거고요.

○장정숙 위원 아니, 6월 5일 날 보내신 근거 자료 요청을 말씀드리는데 겁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러니까 저희가 두 번 보냈는데요. 2월 달에 보낸 것은 비공개 서신이고 6월 5일 자료 발송한 것은 5월 30일 날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개서신을 보냈는데요. 그 후에 비공개 대화가 있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러니까 근거 자료를 요청했는데 근거 자료 요청하고는 관계없이 비공개 면담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자료를 주고받은 것은 수시로 기금본부하고 대한항공 측하고……

○장정숙 위원 그러면 그 근거 자료 본 의원실로 제출하실 수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 자료는 사실은 법상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확인해 보고……

○장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비공개로 경영진 및 귀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경영진 및 사외이사와의 비공개 면담을 요청하셨었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것이 6월 5일이었습니다.

며칠날 만나셨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정확한 날짜는…… 6월 말 정도에 있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것 정확히 날짜하고 누구누구, 그러니까 대한항공 측에서 누구 만나셨습니까? 김성주 이사장님 나가셨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아니, 저는 나가진 않았고요……

○장정숙 위원 누가 나가셨습니까, 여기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우리 기금본부의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장정숙 위원 직원이라고 말하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신을 보낸 조인식 대행이 나가셨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간부급 직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것도 비공개 면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를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게……

○장정숙 위원 그러면 만나셨다 이거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장정숙 위원 그러면 만나셨던 분 중에 누구하나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조인식 대행……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법과 제도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확인해 보고 답변해 주시고요.

국민 관심사가 매우 집중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렇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 공개하지 않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지만 백번 양보해서 비공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한항공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어저께는 심지어…… 고 조중훈 회장께서 불란서에도 빌딩을 갖고 계셨지요, 임대료 스위스 계좌로 넣고?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태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더 기고만장해 가지고 국토부가 갑질을 하네, 뭐 하네 하면서 여론몰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장정숙 위원 그런데 그냥 기업 압박에 견디지 못했습니다라고 실토하시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저희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저희의 원칙입니다.

○장정숙 위원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되는 국민연금공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장정숙 위원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렇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밖에 운영을 못 하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매우 미흡하다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미흡 정도가 아닙니다.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입장 좀 밝혀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이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또 주어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대화도 했고 또 공개적인 문의도 하면서 사실상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그러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영 간섭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제약 요인이 있어서 그 제약 요인이 제거되고 나면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뿐이지 저희들 활동이 그렇게 미진하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장정숙 위원 알았습니다.

좀 이따가 보충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인천 서구율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로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공부가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로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7월 17일 날에도 생겨서는 안 될 통학차량 사고가 생겼고 또 그다음 날 바로 아동학대로 사망 사고가 생겼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연이어 생겼는데 어쨌든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긴급하게 24일 날 보고를 드렸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동근 위원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는 아동을 확인하는 장치를 전체 차량에 다다는 것, 그것을 올 연말까지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2차, 3차의 감시체계나 알람체계를 저희들이 좀 실효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또 2차, 3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면 근본 원인이 뭔가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대책이 한 번 생긴 게 아니고 이 세 개가 문건이 거의 비슷해요. 이것 할 때마다 조금씩 바꾸어 가지고 이번이 제일 완결판으로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수준이 거의 재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16년에도 광주에서 또 통학차량 안에 어린이가 방치되어서, 그 어린이는 지금 뇌사 상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요? 말하자면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가 없어서 그런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당시에는 물론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규정이 미비된 것은……

○신동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그것을 달면 해결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과거에 어린이 학대에 의해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니까 CCTV를 달면 마치 될 것처럼 해

서 CCTV를 다 달았습니다.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CCTV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애를 깔아뭉개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물론 우리가 건널목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면 훨씬 사고는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대책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정말 안타깝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를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초점을 둔 것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 초점이었지요. 그리고……

○신동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보육교사의 질을 좀 높여 내고 근무환경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희도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동근 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제가 앞서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할 때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마는 보육교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체계를 좀 바꾸는 것을 저희는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좀 더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것은 보조교사 내지는 담임을 2명을 두는 제도를 저희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육교사들 특례조항이 없어졌지요? 그래서 휴게시간을 1시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닙니다. 현장에는 정말 땀질식으로 처방이 내려갔고요. 현장에 가서 제가 직접 여러 곳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내려와 있는 보조교사 6000명으로서 그 보조교사를 받은 어린이집은 가능하지만 나머지 어린이집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임시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동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재워야 돼

요. 강제로 재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건·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그리고 표준보육료 문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작년에 예결위에서 누리과정 관련해서 전액 국고지원을 하는 대신에 실령을 해놨어요. 다시 말해 더 이상 예산 확대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겁니까? 보건복지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누리과정 예산은, 특히 인건비 부분은 교육부 소관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요. 다만 0~2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9% 정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교육부와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김성주 이사장님, IMD가 매년 63개 국가경쟁력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작년에는 29위, 올해는 27위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국가경쟁력 평가 중에서도 가장 순위가 낮은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사회복지 분야가 아닐까요?

○신동근 위원 그게 아니고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 경영 관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2018년에 63개국 중에 55위예요. 거의 꼴찌 수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영 관행이라는 게 결국은 회계감사 그다음에 기업의 이사회 운영, 경영실패도, 이런 말하자면 기업민주화와 관련된 문제예요. 최근에 우리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서도 총수의 갑질 문제가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신동근 위원 그리고 또 공정위 발표를 따르면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되는 비율이 1% 미만이라고 그래요. 거의 어떻게 보면 총수 독재지요. 인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신동근 위원 그래서 최근에 국민연금에서 아

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신동근 위원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내일 열리는 기금운용위에서 최종적으로 도입이 결정되면 저희는 실무적인 준비를 거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이제 도입 시기는 제반 여건을 고려한다 이렇게 했으니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러니까 내일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다면 저희는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신동근 위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를 국민연금공단이 무슨 연금사회주의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지나치게 이념적·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연금사회주의가 아니라 연금자본주의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수익률을 최대로 올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합니다.

○신동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성의 원칙하에서 투명하게 하되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하는 데 좀 국민연금공단이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특히 해외 연기금들은 굉장히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좀 늦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각 나라마다 형편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동근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신동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민주평화당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달 초에 익산 한 병원에서 응급의학

과장이 무지막지하게 폭행당하는 동영상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감옥에 갔다 와서 죽여 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광수 위원 최근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을 경찰청에서 받아 봤는데 급증하고 있어요. 2013년에 검거 건수가 123건인데 꾸준히 증가해서 2017년에 425건, 거의 한 4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검거 인원은 152명에서 477명, 한 3배 넘게 급증하고 있어요.

저는 의료현장에서 이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단지 언론에 크게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의 방금 말씀한 것은 예고된 참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복지부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이 발생하고 있는 수 자체는 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파악을 못 하셨으니 대책 마련을 안 하신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2016년에 의료인 폭행 방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때 이미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신설하고 그랬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급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광수 위원 처벌도 강화해야 되지만 다른 대책 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뒷북 행정만 할 게 아니고 향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인 폭행은 환자의 안전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복지부가 어떻게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 좀 정확히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 위원도 처벌을 더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법안 발의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확히 환자의 안전,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복지부장관님 한 가지 더, 지난 19일에 국가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었던 2030 청년세대 그다음에 가정주부, 전업주부에 대해서 국가건강검진을 도입하기로 의결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번에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광수 위원 늦었지만 다행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20대 국회에 처음 등원해서 2016년 7월 본회의에서 제 첫 5분발언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청년 국가검진 실시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 문제는 법으로도 제가 2030 청년, 전업주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상임위나 국정감사나 법안소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뭐라고 답변을…… 내가 그때 회의록을 뽑아 봤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이것은 ‘국제 의 학계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부정했고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그것을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계속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물론 그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그렇게 답변한 일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문제인 정부 들어와서, 박능후 장관 체제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전 정권에서 계속 그래 왔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2030 청년이나 전업주부 국가건강검진을 도입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 300억……

○김광수 위원 수검률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지요. 그러면 약 300억에서 한 520억 정도 추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많이 드는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취업에 관한 스트레스 많고요 수면부족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으로 그냥 때우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성인병에 거의 다 노출이 되어 있고 폐결핵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아주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국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제기를 했다는 것은 장관께서 파악하고 계셨나요, 국회에서 이렇게 제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에게 뚜렷하게 인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회하고 상의를 하는 게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시행령으로 이것을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권이 바뀌어서 입장이 바뀌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법이 상임위에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다른 검진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른 인구 계층에 대한 건강검진도 만약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2030 세대만 법에 규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법체계상 법체처에서 논란을 제기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김광수 위원 국회입법조사처의 심의 다 마치고 나간 법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지요, 법체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따라서 이것은 시행령으로 결정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법을 개정해서 취약 계층들이 반드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체제로 확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반드시 이번에는…… 이게 예산 많이 드는 것들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정말 요즘에 청년실업이 최악으로 치솟고 그다음에 가정의 전업주부들의 노동력을 어떻게 계량하고 인정할 것인가라고까지 이야기되는 이런 시대에서 이렇게 사각지대로 방치해 놓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규 위원 저는 민주당 천안병 국회의원으로 국회 의원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혹여 실수나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걱정을 안 합니다.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요 교통질서가 사회 바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바깥세상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싶어서 그냥 저는 마음 놓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희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꿈의 제도라고 하는 문재인 케어를 준비하고 또 실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는 데서는 아마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혜택을 보는 사용자인 국민이 있고 또 국민에게 이런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사용자가 존재하고 이 두 직역 간을 조정하는 관리자인 정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구조가 아주 합리적으로 잘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마 성공의 열쇠라고 보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제도가 아까 말한 세계적으로 결핵이 1등인 이 국가에서 성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가지만 그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예산의 추계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곧 예산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부 측 입장은 그것은 아닐 것이고 다른 대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초기에 발표할 때부터 여러 가지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차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바로는 저희들이 처음 계획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윤일규 위원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좋은 쪽으로 사업은 되는데 어쨌든 간 이유는 모르지만 돈은 별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가능한 좀 재정을 아껴 가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지금…… 그런 기조 속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규 위원 그런데 그 속에서 핵심적인 시스템 중의 하나가 작동해야 될 것이 의료전달체계거든요. 그래야 의료보험제도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에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있잖아요. 효율화될 수 없는 구조……

그 대표적인 것이 2018년 1분기 진료통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환자가 거의 반이나 늘었습니다. 41% 이상 늘었습니다. 결국은 3차병원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 외에는 환자들의 진료의 의료전달체계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단순히 표현하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있다는 소리지요. 그런데도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될 기전이 작동하지 않아도 돈은 많이 안 들고 의료보험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현상은 저희들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어서 의료전달체계를 가능한 한 중증과 입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하고 동네 1차의료기관들이 경증이라든지 만성병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난 2년간 관련 이해 당사자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몇

차례 그것을 논의했고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가 또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된 상태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일규 위원 장관님, 그것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선택진료비라는 것이 선택진료비가 아니고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 낮은 의료수가를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일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가를 보전하고 선택진료비를 폐지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보전의 형태를 충당하고 선택진료제를 없앴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선택진료제가 없어지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벌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일규 위원 제가 사실은 거의 47, 50년 가까이 의료인을 했기 때문에 잘못 나오면 국민을 위한 답변이 아닐까 오해가 많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 속에서 아까 말한 대로 3자 중 공급자에서……

장관님께서서는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련제도 자체가 거의 몰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련제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외과계열은 거의 지원자가 없어서 가고 있고 또 지방에서는 수련을 거의 안 하고 서울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제도 자체가 사실은 몰락하고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대형병원들, 중간병원들의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손으로 회생을 하면 되겠지만 그들의 손으로 회생하지 못하면 국가가 여기에 깊이 개입해야 되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자가 없는 의료제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재정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공급자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외견상 보이는 현재의 이상이나 꿈만 갖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하는 것을 소상히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아마 이 제도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

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아까 이야기한 국고 지원 문제를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20%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윤일규 위원 그런데 올해 지원하는 걸 보면 거의 6~7%가 부족한 13.4%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문재인 케어를 할 때 추계되는 여러 가지 예산을 이런 쪽에 충분히 보완하면서 이 제도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13.4%라는 보완이 전혀 없는 상태로 끌고 가면서 사실은 그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의료보험에서 실제로 인상률이 3.49%로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실제로는 국가에서 낼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사실은 주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부담만 늘리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도 참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국고부담률 20%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20%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이렇게 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20%를 국가가 부담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하고 저희들이 그 문항을 두고도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건강보험료를 자체를 처음에 설계했던 대로 평균 3.2% 정도의 인상률을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쪽을 저희들이 좀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일규 위원 저는 왜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 하나면 어쩌면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체계적인 제도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나 성공하지 않느냐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되지만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의료제도에 대해서 정말 모범이 되는가를 입증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예산을 배정하는 국가의 자세나 기재

부의 자세가 과거의 형태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과감하게 지원하면서 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지 관행은 과거의 관행대로 남아 있다면 저는 이 제도가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저희들도 그런 자세로 기재부하고 꾸준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도 저희들 주장과 논리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점차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이명수** 윤일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7분을 기준으로 하고 대개 1분씩 더 쓰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을 더 드리지 못해 아쉽고요.

앞서 걱정하신 실수나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의정활동 이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 윤종필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것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건보재정이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건보재정 기금화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8종의 사회보험 중에 가장 지출 규모가 크고 정부지원액도 많은 사회보험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맞습니다.

○**윤종필 위원** 하지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종의 사회보험 중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만 국회의 재정 통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재원도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의 심의가 없다 보니까 공단과 심평원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연구·홍보

및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업무 중복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건강보험의 기금화를 권고한 바 있는데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국민건강보험의 기금화를 통하여 국회의 심사를 거쳐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기금화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이어 왔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렇습니다.

가야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래서 기금화했을 때 장점도 있고 또 현행과 같이 당사자 간의 자율적 운영, 특히 재정을 부담해야 될 국민들의 대표가 직접 재정 상황을 확인하면서 효율을 결정하는 이 방식도 제도 운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됩니다.

○**윤종필 위원** 장관님, 두 번째로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정심 위원 구성 한번 바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중요한 보건 의료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건정심 위원 명단을 보면 위원장 1인,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 총 2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단체인데 입장이 다른 두 단체를 조율해야 할 공익위원 8명이 대부분 정부 쪽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 쪽 입장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19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무려 3.49%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장관님께서도 그동안 보험료율을 최대 3.2%만 인상해도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도 2019년 8년 만에 최대치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 큰 문제는 보장성이 강화되는 이 시점에서 건정심위를 정부의 입맛에 맞게 운영한다면 나중에는 얼마나 더 인상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면서 건보시스템 구축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기금화 추진해 주시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중립적 입장 견지할 수 있도록 공익대표 위원 구성 한번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보험료율을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보장성 강화 전체를 통해서 평균 보험료율 인상을 3.2% 말씀드렸습니다.

○**윤종필 위원** 평균인 것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작년에는 2.03% 인상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그것을 조금 고려해서 3.49, 대략 합치면 2.5% 정도 되는……

○**윤종필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보장성이 강화되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3.2%가 최대치라고 생각을 했었고 조금 더 됐지만……

그리고 장관님, 본 위원이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부터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격오지·도서지역 만성질환자 등은 원격의료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여러 차례 제가 전달했었습니다.

지난 19일 장관님께서 기자간담회에서 ‘18년 답보 원격의료 더 늦으면 의료 세계 1위를 못 지킨다. 초기에는 의사와 환자가 대면을 하고 이후 정기적인 관리는 원격의료를 활용하자는 쪽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발언 취지가 원격의료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전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어진 법의 범위 내에서 현재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허용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를 하자는 그런 뜻이 기본이었지요.

○**윤종필 위원** 원격의료는 의사들의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먼저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후퇴했지만 여전히 오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는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문간호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간호사 입회하에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시다. 그 사이에 일본 미국 중국 등은 IT 기술과 접목시킨 원격의료 시스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 의사들은 원격의료 도입 거부하는 국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런 반응도 보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시대 변화에 맞는 의료 신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장관님 의지는 환영하지만 어려움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중심 잡고 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시고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과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시어 적극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윤종필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위원**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해숙입니다.

장관님,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자살 예방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언론별 자살보도 평가점수 공개, 인센티브 도입을 제안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보건복지위원님들도 다 그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난 지금 언론사에서는 여전히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사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존경하는 고 노회찬 의원님 보도가 너무 사실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은 굉장히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사실 지금까지도 보도되는 기사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 우수보도상을 시상하면서 적극적인 인센티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기자회견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올해 7월 31일날, 앞으로 한 일주일 뒤입니다.

○**전혜숙 위원** 권고기준밖에 못 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까지는 권고입니다. 새로운 권고기준을 만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

으로 호응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살률이 2017년 WTO에서 나올 때는 세계 4위이고 OECD 2위입니다. 1위에서 리투아니아가 들어오면서 2위가 됐지만 모든 파트에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자살 이것을 갖다가 너무 미화해도 안 되고요. 이것에 대한 보도도 굉장히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흉내 내기 자살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대책을 조금 더 잘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전혜숙 위원 지금 자살 유가족의 자살 위험이 또 더 심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 8배 정도 높습니다.

○전혜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에 비해서 8.3배나 크거든요. 자살 유가족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살 유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그들이 서로 교통하고 소통을 하면서 서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지금 유가족에 대한 어떤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전수조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혜숙 위원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 비도 지금 현재 사용된 게 별로 없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전혜숙 위원 이렇게 해서는 자살 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립트라우마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인력을 정부가 행안부에 요청한 게 25명이에요. 전문 인력 이렇게 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세워 놓고 허울뿐인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해서는 앞으로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 유가족에 대한, 일단 자살자가 생기면 유가족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유가족들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통해서든 지역에

있는 트라우마센터를 통해서든 정부가 접근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치료를, 치유를 바로 시작하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물론 국립트라우마센터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지역별로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정신건강센터도 있지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계가 안 됐다는 말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예산을 봤어요. 봤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계도 없어요, 제대로 된 집계.

있으면 갖고 오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립트라우마센터를 만들고 트라우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정신건강센터가 제대로 되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왜 만들었겠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국적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이런 것을 치유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복지부가 대처하고 있는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그 정도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확대 개편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건보재정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당이익 규모가 2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병원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율은 7% 정도, 낮아요.

사무장병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대충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전혜숙 위원 2017년도만 해도 225개가 되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전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곳을 특수 사법경찰제도를 동원해서……

○전혜숙 위원 그것은 항상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올해는 아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런데 부당이득 환수율이 평균 7%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국민들의 건강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가하고 있고 국민들 건강을 이용해서 장사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확실하게 내놓고 면대약국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케어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전혜숙 위원** 그래서 건강보험재정 관리가 필수적인데 제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도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건강보험재정 절감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자병원을 정부가 확충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험자병원을 통한 의료비 절감은 사실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혜숙 위원** 아니,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하나밖에 없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

○**전혜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보험자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여기에 대한 기준들을 몇 개를 만들기 위해서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 말씀 저희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보험자병원을 포함해서 각종 요양병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전혜숙 위원** 연구용역은 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의지가 좀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1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난 정권에서도 문형표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가고 그랬습니다.

인사를, 임명권자는 이사장이 맞는데 인사 검증은 할 수 없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검증의 주체

이기는 합시다만 검증 사무를 현재로서는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청와대 민정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이사장에 대한 인사 개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이번에 CIO 공모와 재공모의 문제는 본질이 어떤 외부의 인사 개입이나 내정 또는 월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검증에 관련된 문제라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검증을 이와 같은 글로벌 기금운용 역량이 필요한 분을 뽑을 때 일반 공직자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것은 좀 논의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금이사도 국민연금공단의 한 명의 이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검증 기준과 잣대가 적용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전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역시 여러 가지 예리한 말씀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 위원** 보건복지부 공직자님 반갑습니다. 부산 수영의 유재중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2014년 보건복지위에 있을 때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서 여당의 파트너로서 일해 봤는데요. 이 도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됐던 것이 국가재정이었습니다. 청년실업이 최악이고 지금의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시스템에서 복지재정 확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여쭙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될 노인인구입니다. 즉 내려가면 이제 2050년에 가면 1.4명이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노인부양비율의 증가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세대가 재정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복지지출 확대에 의해 우리의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柳在仲 위원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문 케어, 과연 지속가능한 정책인가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장관님,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이 자료는 지난 6월 23일에 개최된 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 보고된 건강보험 중기재무전망입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柳在仲 위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전환돼서 2022년까지 누적 적자가 9조 원이 넘습니다. 이대로라면 10년 후에 20조에 달하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지요. 과연 장관께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장성 강화가 지속가능한지 좀 의심스럽고요.

보장성 확대에 의해 가지고 5년간 적자 9조 원이 발생하게 되면 2022년에는 20조 원인 준비금이 11조 원으로 보험급여비 1.5개월분만 남게 되는데 장관께서는 왜 준비금에 1.5개월분만 남겨 두도록 추계를 하셨는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줘서 이렇게 추계가 됐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판단에서 임시적으로 돈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1.5개월분만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게 재정운용 상황이라든지 외국 사례들을 보면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대략 한 2개월 남짓한 적립금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5개월분 급여비를 남겨 두는 것이 꼭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마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柳在仲 위원 큰 무리는…… 작은 무리는 있습니까, 그러면?

장관님, 화면의 자료를 보세요.

건보공단이 2015년 11월에 발간한 '건강보험의 안정적 법정준비금 개선방안'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험급여 충당부채…… 이것은 근거

가 있는 거예요, 장관님 말씀하신 것은 근거 없이 그냥 큰 무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는 자체적인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고.

보험급여 충당부채 대비 1.4~1.7개월분, 경제위기 대비 1.2~1.8개월분, 신종플루나 메르스 등 감염병에 대비해서 0.1이라든지 0.5개월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적정 준비금을 2.7~3.8개월로 추정해 나와 있어요.

건보공단의 보고서는 잘못된 겁니까, 이것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한 건데?

그래서 2016년 7월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2015년도 결산분석서에서도 급여비 청구에서 지급까지 통상 1.5개월이면 충분, 업무처리 기간과 여유자금을 고려할 때 3개월분이 적정할 것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조금 전에 외국 사례라는 데, 오히려 많은 전문가들이 외국 사례까지 검토해서 연구하고 제시한 적정한 준비금을 무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리하게 재정계획을 세웠는지 참 의아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부 공약이라 해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확실한데도 재정추계를 무시하게 되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2022년까지 지금의 적립금 10조를 사용한다 해도 2022년부터는 어떻게 적립금 10조 원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인지 참 의심스럽고요.

건보공단의 재정추계대로라면 2022년에 1.5조 원이 넘는 적자와 칠팔천억 원씩 늘어나는 충당부채에 맞추어 준비금을 그래도 1.5개월분으로 유지하려면 2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추가 적립해야 하는데 이게 장관님 말씀처럼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뭔지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만약 그게 우리가 충당금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한다면, 그게 국민적인 합의라 한다면 보험료를 인상을 하거나 또 국고지원을 조금 더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柳在仲 위원 그래요, 그것밖에 없지요.

장관님이 이렇게 잘 말씀하셨는데 최근 5년간 정부가 부담한 건강보험 법정지원금, 화면에 나오는데 앞서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정부는 보험료 수입의 14%를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 5년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요. 지금 9.7%,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미지급금이 2조 1000억에 달하고 있어요.

이것을 충당하고 또 보장성 확대를 해야 되니까 어떤 방법이 나오느냐, 국민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국민. 정부는 법정지원금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얼마입니까? 2011년 이후 최대인 얼마입니까? 최대치가 얼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

○柳在仲 위원 3.49입니다. 왜 말씀 안 하세요? 3.49% 인상 이렇게 해서 문 케어로 인해 가지고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동수당 도입이라든지 기초연금 확대 등의 복지 분야 재정지출이 크게 늘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 기획재정부가 법정지원금까지 늘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장성 확대 방안이 지속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적정 준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마치 국가가 모두 지원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숙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 자체는 우리가 확대하고자 하는 보장성 강화가 70%가 목표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OECD의 평균 기준인 8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장성 강화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은 아마 누구나 다 수긍할 거라고 생각되고 다만 그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이냐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보장성 강화 방안은 나름대로 하나의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어서 좀 더 많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柳在仲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세요.

장관님, 말씀은 잘하시는데, 뭐 OECD 기준 그러시는데 다른 것은 OECD 기준으로 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십시오. 지출, 복지 지출이 얼마나 증가하고 국가부채가 얼마면서 건전재정의 위기가 얼마나 돌아왔는지 이런 사항을

점검해야지요. 왜……

저도 국민들에게 보장성 확대 더 많이 복지에 해 주기 바라요.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매고 그런 가운데 복지지출을 해야지요. 뭐 OECD 기준하고 얼마밖에 안 되는데 OECD는……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국가부채가 얼마입니까? 1555조이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지금 또 경제도 어렵고 이래 가지고 이러는데 자꾸 국민한테 세금 더 거둬들이고 또 보험료 인상하고 해서는 되지 않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柳在仲 위원 적정하게 보장성 확대를 해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유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정부에서 지난주에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말씀하셨어요. 그중에서 기초연급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소득하위 20%에 한해서 19년 내년부터, 그리고 소득하위 20~40%는 20년부터 기초연급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요.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자라고 하는 것에 아마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로 소득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이 대책이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초연급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분들은 받은 기초연급만큼 생계급여에서 깎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래서 정부가 흔히 말하는 ‘줬다 뺀 기초연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하위 20%, 150만 명 중에서

30% 정도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43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으로 인한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차례 제기하고 있고, 알면서도 이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정책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책의 혜택이 가지 않는,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저희가 복지부 기초생활과에 질의를 했더니 답이 오기를 이렇게 왔어요. ‘현실적으로 노인의 극심한 빈곤 상황 등을 감안하여 현재 관련 전문가, 재정 당국 등과 함께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왔어요. 이 신중히 검토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겠는데 또 하나는 기초연금에서 공무원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까지 지금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렵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원천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실에 하루에 한두 건씩 꼭 이와 관련된 민원이 옵니다.

(편지를 들어 보이며)

제가 편지 온 것을 갖고 왔는데요, 편지가 계속 와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독소 조항이 없었어요. 2014년에 박근혜정부 시절부터, 정부가 강행한 기초연금 때부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생겼는데 생활이 어려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하는 제도가 원래 취지인데 이 제도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그리고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하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든 복지부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저도 관련된 법안 내고 바로 ‘너무 좋은 법안이다’ 이런 격려도 받았고 지금도 계속 우리 사무실로 이와 관련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소득하위

20%에게 기초연금 더 빨리 30만 원씩 주고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그러면 나는 뭔가 이러한 생각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공무원연금인 경우에 다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신중히 검토’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중히 검토는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장관님,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썼다 뺐는다는 그 민원은 저희들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정말 공공부조의 원리라는 이론적인 측면하고 현실의 어떤 어려움하고 부딪히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저소득층 소득지원 대책을 하면서 하위 20%에 대해서는 절반이라도 소득인정에 의해서 감해 주는 것을 하고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재정 당국과의 대화에서 저희 복지부 공무원들이 그냥 연금을 앓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는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정 당국과는 충분히 합의가 못 돼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표현을 썼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것은 기초연금의 기본 뜻이 공공부조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받건 안 받건 관계없이 일정소득 이하, 즉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속한다 그러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답변이 참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초연금 관련해서 답변들 온 것 보면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기초연금이 제외되는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 같은 경우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데 거기서 20만 원씩 다 제치고 주면 사실은 안 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현실에서는 굉장히 건디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정 당국이랑 언제 어떻게 다시 의

논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이것은 어떤 요구가 있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도라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원리가 있고 기본원칙이 있기 때문에……

○**정춘숙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과적으로는 보충성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꼭 그렇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이 예컨대 과거에 우리가 보훈연금 같은 경우에도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서 다 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보훈연금의 경우에는 그게……

○**정춘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게 지금 이 더운 날씨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노인들이 이것을 다 제외당하고 받는 것만큼 심각한 여론이 어디 있어요? 이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안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왜 그렇게 대안이 안 나오느냐 하면요……

○**정춘숙 위원** 아니,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루틴한 일반적인 설명을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재정 당국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좀 더 설득해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장관께서 저한테 주셔야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쉽게 될 수 있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것이 기초보장수급자 아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 옆에 비수급 빈곤층이나 더 어려운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계층을 먼저 도와주기 위해서는 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정춘숙 위원** 지금 줬다 뺀은 얘기 하시는 게 아니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줬다 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이지요.

○**정춘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춘숙 위원** 43만 명이나 되는 노인들이 받지 못하는데 이런 정책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정말 고민을 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지금 어떤 상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재정 당국이랑? 언제 어떻게 만나실 생각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미 수차례 만나 봤습니다. 이미 수차례 만나 봤고 이번에 추경에서 안 되면 다음 내년 예산에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계속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춘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이 정하실 문제예요? 어떤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통령의 뜻이라기…… 뭐 힘을 실어 주시면 더 큰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무자 선에서 논리 대 논리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를……

○**정춘숙 위원** 아니, 이게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는 그 논리 말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거나 그 개발하는 논리가 현실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보여 주는 것밖에 없는데, 보고 있으면서도 납득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초보장수급자의 연령을 끊어서 좀 더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줄 수 없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같이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셔야지 돼요. 예를 들면 저한테 지금 설명하신 것을 설명할 게 아니라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일 빠른 방법은 위원님들이 그냥 예산을 올려 주시면 쉽겠습니까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니까 저희들이 예산 당국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저희들도 고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위원님보다

저희들이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할 말이 없네. 참 마땅치 않은 대답이십니다.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정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뭐 시간이 아쉬운 건 저희도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복지시대에 복지 수요는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팽창하는데 질적인 관리 그것을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 복지에도 설계 시 예상되지 못했던 문제 그것을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신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 경기 성남 중원 지역에서 온 신상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는 예나 지금이나 여야 없이 치열하게 우리 정부 부처 질타를 많이 하고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 아주 바람직한 상임위로 다시 한번 또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메르스 사태가 3년 전 이맘 때 온 국민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아주 많은 피해를 줬던 것 기억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장관님, 취임하시고 1년 가까이 되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1년 막 지났습니다.

○신상진 위원 지났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상진 위원 메르스 사태, 그러니까 국가의 전염병의 그런 위급한 상황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당시에 노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신 적이 있습니까, 임기 중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잘 될 것 같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꼭 100% 자신은 힘들지만 우리나라 감염병 관리 대응체계가 엄청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신상진 위원 잠깐요.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부

분은 없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게 특별히 미흡하다는 것은 제가 아직은 뭐…… 제가 그 안에 있어서 그런지 발견을 못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감염병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국제기구로부터 우리가 점검을 받았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받은 겁니다마는 결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 오히려 심지어 미국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신상진 위원 하여튼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부에서도 어느 장관 임기 중에도 옛날에 신종플루 사태 등등 하면서 다 대책을 세웠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잘 되고 있다고 또 평가들을 해 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막상 사태가 터지면 아주 굉장히 많은 혼란과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신상진 위원 어떠세요? 직접 주무 담당 본부장님으로서 앞으로 그런 국가 전염병이 크게 문제가 된다면 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족한 점은 없어요?

기획재정부 이런 데서 재정 투입을 이런 면에서 더 해야 되는데 못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간략히……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메르스 이후에 국가방역 대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학조사관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양적·질적인 확충이 아직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의 감염병 대응 조직이나 인력이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것도 계획이 있는데 현재 1개소 정도만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인프라에 대한 보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앞으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관심 가지시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미비한 점, 앞으로 개선할 점, 보완해야 할 점을 저에게 자료를 잘 만들어서 솔직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가 오늘 보건복지위원으로 오게 됐다

니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월에 개정하고 8월 9일 시행 예정인 것이 있어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상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16세 미만자로부터 적출 금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추가된 것이 손, 팔 적출을 못 한다 이거예요, 16세 미만.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말초혈을 적출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조혈모세포에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또 자기에게 바로 자가수혈도 합니다, 말초혈을. 그런데 이것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16세 미만의 적출을. 그러니까 소아들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복지부가 현장의 전문가, 의료 이런 분야가 얼마나 전문적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적출을 골수에서 해야 돼요. 골수를 적출해야 돼요. 전신마취 시켜야 돼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자가 확인해서 말초혈 이것은 짝 빼야 됩니다. 그것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특별성 확장성 심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엄마가 민원을 주신 건데 12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그런 진단을 받고 베를린하트라고 하는 이식형 펌프를 달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 비용이 첫 수술할 때 1억이 들고—비급여입니다—그리고 유지비가 세 달마다 3000만 원씩 든대요. 이것은 뭐 돈 없는 사람은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국민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비급여된 것을 급여화한다는 것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구석에 있는 이런…… 치료비가 엄청 비싸서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케이스는 많지 않지만, 보편성은 떨어지지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좀 검토해서 보험급여로 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필요하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상진 위원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운용본부장(CIO) 선정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신상진 위원 지금 이게 말이 안 돼요. 635조라는 엄청난, 세계 3대 기금이라고 자랑하면서 그것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그리고 사람을 구하다가 3명 공모했는데 그것 가지고 또 구설에 올랐지요. 청와대 장하성 실장이 박태선 씨인가 누구를 권유했다, 그리고 3명 거기서도 적당한 사람이 없다 하고 또 2차 공모를 냈는데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신설해서 넣어 가지고……

이게 일련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이런 거대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흡함이 드러났다, 미숙하다 이런 생각에서, 아까 또 실장, 책임자들도 아직 공석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고, 코드에 맞는 인사가 아니고 정말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실력자를 제대로 빨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사실 지난 2월부터……

○신상진 위원 공모 마감기간이 언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공모 마감은 지난 주에 이루어졌고요. 이제 서류 심사하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서둘러서 임명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상진 위원 하여튼 공정하고 투명하고 실력 있는 사람 꼭 빨리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저희들 고민이나 위원님들 생각이나 또 국민들 요구가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상진 위원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이 박태선 후보자를 개인 접촉을 하시고 한 것도 굉장히…… 우리가 법적 검토를 해 봤더니 그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그런 법적 검토까지 받았는데, 그것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한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알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경륜이 묻어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가 마무리되는 시간이 오는데요. 오제세 위원님하고 기동민 위원님 계십니다. 두 분이 하신 뒤에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금년에 예상되는 출생자가 몇 명인지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33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33만 명이지요. 작년이 35만 7000명이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오제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의 작년, 2017년 그리고 2018년…… 40만 명이 깨진 해가 2017년 그리고 금년에는 35만 명이 깨졌어요. 이것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온 국민이 다 느끼고 있고 지금 일본의 예를 들으면서 어떤 마을이 소멸되는 그런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저는 출산이 35만 7000명으로 떨어졌다 하는 것이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건이다, 그리고 2018년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은 출생이 35만 명 밑으로 떨어진 이 일이 어떤 일보다도 가장 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5의 출산율을 보였는데 우리나라가 1.3 이하로 떨어진 게 18년째입니다. 그런데 1.05로 해서 앞으로 2035년의 인구를 예측해 보면 얼마나 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현재보다 600만 명이 줄입니다. 현재 3700만 명인데 2035년에 3100만 명으로 600만 명이 줄어요, 17년 동안.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750만 명인데 2035년에 1500만 명이 됩니다. 750만 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7년 동안에 생산가능인구는 600만 명이 줄고 그 600만 명 준 인구는 전부 65세 이상 인구로 750만 명이 늘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035년에 생산가능인구가 3100만 명인데 아마도 이 중에서 고용률로 하면, 일하는 고용자는 한 60%로 보면 2000만 명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5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연금을 내는 사람이 2000만 명이고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1500만 명 이상이 되는…… 65세 이상이 1500만 명이니까 60세 이상이 연금을 받아 간다고 하면 1500만 명이 아니라 약 2000만 명, 그러니까 한 명이 연금내고 한 명이 받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2035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리고 다음에 연금 고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연금 고갈이 지난 3차 재정추계했을 때 2060년에 연금이 고갈된다 그렇게 추계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출산율이 1.05가 아니에요. 1.34 이렇게 추계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훨씬 더 높게 추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4차 추계를 하시면 아마도 고갈 시점이 10년 앞당겨질 것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2060년에 고갈이 된다고 했을 때 2070년, 고갈되고 나서 10년 동안 누적 적자가 5300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80년, 20년 동안의 누적 적자는 1경 2200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금이 고갈되고 나서 10년, 20년 후에 적자가 5000조 그리고 1경 2000조가 나온다, 연금이 고갈되는 순간 그 이후에 어떻게 10년 동안 5000조를 가지고 연금을 줄 수 있겠느냐? 어떤 방법도 없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5000조의 적자가 발생하는데 매년 500조씩을 어떻게 걷어서 연금을 줄 겁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지금과 같이 적립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부과식으로 바뀌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제도는 연금 고갈 이후에 10년 동안 5000조, 20년 동안 1경 2000조를 꼬라박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연금을 올려도 감당이 안 돼요. 제도 자체를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빨리 바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뀌야 될 이유는 지금 현재 650조를 쌓아 놓고 있는데 매년 50조씩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정부가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국민연금만 1년에 50조씩을 쌓고 있는 겁니다. 정부나 모든 예산이나 돈

이 없어서, 단 1조가 없고 10조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못 하는데 50조 원을 쌓아 놓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1000조까지 막 쌓아 놔요. 그리고 2500조까지 갔다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면 2500조까지 갔다가 고갈되는 그때는 매년 200조씩 막 내려가거든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했던 것을 매년 200조, 300조씩 팔아 치워야 돼요.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 심각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오제세 위원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제도를 빨리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지금 4차 재정계산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과 방식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국민들 정서는 현재하고 있는 부분적립 방식을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방식까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다 말씀을 못 드리고 국민연금과 복지부와 우리 상임위가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별도의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오제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출산 문제, 연금 고갈 문제, 매년 반복되는데 정말 근본적인 대책…… 뭐 제로베이스에서 한 다, 여러 번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솔루션을 확실하게 갖고 있지 못한데 더 고민과 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차 질의 끝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오늘 하필이면 대법관 인사청문이 겹쳐서 자리를 조금 이석을 했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발사르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럽의약품안전청 발표 이후에 당국이 사전예방적 조치로 잠정 판매중단을 시키고 제조·수입 중지를 조속히 발표한 것은 위해 예방을 위해서 긴밀한 대응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실제 전

문가와 제약업계 내에서도 발암물질이 발견되긴 힘든 구조적 한계 속에서 식약처가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번 사례와 같이 원료 공정 과정이 변경돼서 불순물 개입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엄격한 원료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시험·분석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조속히 시험법을 마련하고 불순물 포함 여부 및 그 함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동일 이슈를 조사 중인 유럽의약품안전청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원인조사, 회수조치 및 위해평가 등을 통해서 국민 불안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기존 처방을 변경하여서 재처방과 투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시민 불편,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좀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비교적 초기에, 주말에 보도가 돼서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대처하기 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주말 사이에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식약처와 같이 협업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현재까지 재처방률이 84%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15% 정도는 연락이 안 가거나 연락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처방에 응하지 않는 분들인데 그 과정에서도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비교적 잘 대처했다고 평가합니다.

엇그저께 장관님 1주년 취임 기자회견 발표 난 것 보고 저는 많이 놀랐어요. 동아일보 ‘18년 담보 원격의료 본격 추진’, 세계일보 ‘원격의료 도외시 땀 한국 의료 추락’, ‘사사건건 발목 잡는 3대 허들, 정부 이번에는 밀어붙인다’, 3대 허들에 보니까 ‘의협,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웃음소리)

제가 허들의 한 중심부에 서 있게 됐는데, 혹시 원격의료의 박근혜정부 시절에 한쪽에서 가열

차게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당에서도 반대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나 정부 여기에서 얼마나 큰 논의와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격의료의 근본을 흔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님 취임 1주년이 아니라 청문회 때도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격오지, 원양어선, GP 등 일부 의료취약지를 제외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은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현 단계 원격의료 확대 추진은 의료 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일부 격오지만 시범적으로 의사-환자 간 모델을 시험하는 것이다’, 혹시 이런 방침에서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뭐 크게 달라진 것 없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런데 왜 보도가 그렇게 아주 자극적으로 나오니까, 3대 허들을 막 만드시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3대 허들은 제가 말씀드린 바 전혀 없고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지적했던 바는 원격의료라든지 스마트진료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정작 그 내용 자체는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원격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기술들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 가능하고 응용 가능한 것은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행법 내에서 의료인 간의 협진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몇 가지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것이 말만 시범사업이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그것을 제대로 해 보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동민 위원 예, 그렇게 말씀 주셨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는데 언론이 오버한 건지, 아니면 장관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것을 기자들이 캐치를 해서 예상 기사를 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관님은 정책의 수장이십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저는 완전히 다 때려 막아야 된다 이렇게는 생

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들도 있고 또 의료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 비대면 진료 자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고, 극구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결국은 재벌 대기업 배불리기에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의료 영리화의 첫 번째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고요. 또 의원급 1차의료기관은 고사하고 대형병원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업계의 위기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더 진중하게 소통하고 토론하고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극대화시켜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되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추진해야지, 자칫 그동안의 과정들이 전면 부정되는 차원에서의 원격의료 재검토 이런 부분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잘 알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리고 국민연금 CIO 선임 관련해서, 과정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장, 주식운용실장, 해외증권실장, 해외대체실장, 전부 다 주요 요직이 비어 있는 것은 엄청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고 사람 알아볼 수 있고 절박한 심정 속에 접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답게 해야지요. 세련되게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동티만 난 것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 것이 또다시 확인되었지만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국민 불안을 야기시킨 것 역시 정부 당국이었던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제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말씀 한번 취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안 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장관님이든 이사장님이든 다 말씀 주십시오. 이사장님이 말씀 주시는 게 낫겠네.

왜 사람이 안 옵니까? 왜 구할 수 없습니까? 월급이 많이 적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크게는 권한이 막강한 데 비

해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많이 안고 있다……

○기동민 위원 끝나고 나면 재취업도 3년을 제한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것도 있고요. 임기는 2년에 플러스 1년 할 수 있고……

○기동민 위원 많이 해 봐야 3년인데 실제 주식을 운용하고 있거나 금융을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대우가 형편없는 거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렇습니다. 아주 짧은 자산운용사의 CEO에 비하면 연봉 수준이 3분의 1 정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좀 지원을 꺼리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동민 위원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것은 기금운용 위원회에서 보수와 처우를 올리도록 결정을 하면 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이제 폭탄 돌리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이 오지 않는가에 대한 분명한 실정과 상황을 국민들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좋은 사람을 모실 수가 없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공직이지만 그래도 특수성들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장관님이든 아니면 이사장님이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드러내놓고 토론하고 공론화시키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설득과 양해를 구해서라도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모셔 와야 되는 것을 더 이상 게을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맞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위원 언제까지 하실래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정권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분발 좀 해 주셔야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해요.

과정 관리에 좀 철저하셨으면 좋겠고요. 제발

비상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책임자를 모셔 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는 비록 승인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일을 그렇게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일을 당하고 보니까 정말 권한과 책임에 비해서 너무 대우가 약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약요소 중의 하나가 2년 근무하고 난 뒤에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임기, 그리고 특히 3년간 관련 기관에 재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사오십 대의 젊고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지 말라는 뜻과 같은 것이예요. 거의 퇴직에 가까운 분이 오셔서 한 3년간 근무하다가 학교로 가는 그 정도가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규제가 되어 있어서 보수나 예우가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적인 관심이 모였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더 공론화시켜서 예우를 좀 더 거기에 걸맞게 하는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래서 의견을 좀 주시면 여야간에 충분히 토론하고 이명수 위원장님께서 워낙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여와야를 가리지 않고 궁극적인, 합리적인 해결책을 얼른 만들어 내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수 시간을 더 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만 기동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하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반 정도 그때 2차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명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장관님, 앞서서 윤일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에 관해서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택진료비가 1월부터 폐지가 됐지요. 그리고 상급병실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해소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상희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몇 번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앞서도 지적을 했지만 1월부터 4월 기간 동안에 빅5의 진료 인원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월평균 1월부터 4월까지 보면 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의원급은 보니까 월평균 증가율이 2%예요. 전반적으로 건강보험 관련해서 급여가 늘어나면서 병원에 가는 그런 국민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뚜렷하게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있는 것은 지금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원을 중심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는 진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4개월 동안 빅5의 진료비 심사 실적을 보면 진료비가 16.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의원급의 진료비 증가액이 8.3%예요. 이것도 2배입니다. 역시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형병원에 있는 의료진들 얘기도 자기네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환자가 몰리고 있다 그리고 그 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병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환자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돼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지부의 지금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지난 1월에 14차 회의를 하고 더 이상 하지를 못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채택이 무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당사자 간에 합의를 보고 거기에 기초해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가장 사회적 마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법을 좀 시도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좀 추진할 생각이구요.

그러나 그것의 진행 상황과 별도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의료기관은 만성병하고 경증·중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대형병원은 입원하고 중증질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다시 개편을 하고 여러 가지 좀…… 결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수가체계……

○김상희 위원 이런 현상들을 지금 감지하고 계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물론 감지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현장과 긴급하게…… 이 협의체가 지금 수가 문제라든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부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상희 위원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합의가 안 된 것이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가서 조그마한 일 때문에 합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큰 틀은 다 합의가 되었고, 그래서 일반병원에 입원실을, 그러니까 의원급 입원실을 운영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아주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부딪혀 있는데 그 부분을 타결하면서 빨리 전달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연금공단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사검증과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또 청와대의 무리한 개입이 있었는지 이러한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러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니까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서 공단 이사장을 추천해서 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장

관의 승인을 받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상희 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국민연금만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없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상희 위원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인사검증을 청와대에 의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기금운용본부의 경우, 그리고 또 앞서도 기금운용본부의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이사들이 다 공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본부장 임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청와대에 의존해야 되는가 하는 것 하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사검증을 할 때 기준이 우리가 장관을 임명하는 정도의 인사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늘 그래 왔다’ 이것은 답변이 안 되고 일차적으로는 장관에 준하는 그런 아주 철저한 도덕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대로 자체적으로 인사검증과 관련한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요즘 우리 국민들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대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법 여부가 아니라 국민의 정서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정부도 그에 맞춰서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엄격한 인사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이견을 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장관이라든가 어떤 공공기관의 장이 아닌 임원, 특히 이와 같이 글로벌 운용능력이 중요한, 시장 경험이 높게 평가되는 이런 직위에까지 똑같은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역시 국회가 그것에 대한 판단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의

동의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연금공단에서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증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입법을 하든 아니면 내부 규정으로 하든지 뭔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은 연금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글썽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이전보다는 문제인……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안.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문제인 정부에 들어서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스스로 그런 제안 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급기관으로서 복지부가 있고 또 국회의 궁극적인 지도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기관 스스로 그런 의견을 내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 말씀드립니다.

○김상희 위원 기관과 복지부가 함께 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장관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이 인사검증의 기준이라는 것을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발언하신 것은 인사검증의 여러 기준 중에서 조금 낮은 단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신 건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국민연금이 650조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634조……

○김상희 위원 630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위낙에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풀이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복지부하고 연금공단이 그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인사검증시스템을 독자적…… 글썽,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지금도 30명이 지원을 하기는 했지만 똑같은 과정을 또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도덕적인 사람을 제대로 뽑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위원장 이명수 시간을 더 못 드려 아쉽습니다만 하여튼 김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기동민 위원님 말씀한 것과 연계시켜서 함께 해서, 너무 조심하지 마시고 지금은 제안도 하고 제기도 하고 하셔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 장관님, 기금운용본부장이 인사검증 대상이에요? 청문회 대상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청문회 대상이 아니고, 인사검증은 청문회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명연 위원 내부 도덕성 정도 검증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그것을 청와대에다가 의뢰하고……

아니, 장관들도 엄격한 청문회에서 말이에요 하자 있는 사람들 다 통과해서 됐는데, 또 청와대 행정관들 이런 분들 사회적으로 그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도 다 있고, 실명을 거론해서 뭐하지만 얼마 전에 국회 비서실장으로 또 한 번 다시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635조라는 막대한 기금을 운용해야 될 책임자가 1년 동안 공식으로 있다……

왜 안 오는 것 같아요? 지원을 안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명연 위원 먼저 16명이 지원을 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명연 위원 엄격히 검사해 갖고 3배수로 줄였고 그 안에 광태선 씨 이분이 들어갔고, 그런데 여기다 대고 이민 1.5세대에 대해서 병역을 갖다 걸어갖고 커트시킨 거예요.

제가 한번 묻지요.

장관님이 국민연금기금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시지요? 그것 전공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아니, 학자시니까 하는 거지 실무에 적합한 인물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명연 위원 김성주 이사장님, 정치인이시지 기금운용, 금융투자과 관련된 전문가 아니시지요?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것 전공 안 하셨으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전문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는 전문가를 찾는 거예요.

장하성 실장, 정책실장이 그것 전문으로 하신 분 아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분은 그래도 펀드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투자는 잘하시는데, 본인 투자는 잘하시지만 국가의 기금을 갖다 운용하실 정도로 금융투자 전문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국민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병역을 걸어갖고 이분을 탈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못 뽑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나면, ‘왜 사람이 없냐’ 그랬더니 처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퇴직하고 3년 취업제한 같은 것 왜 걸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하고 같이 국정감사 하시면서 많이 지적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전업에 있으면서 막 투자하고 대리 투자하고 정보 팔아먹고 이런 문제들이 다 노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막대한 자금의 흐름 그다음에 투자의 방향 이런 정보를 가지고 다른 회사로 옮겼을 때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되고 이런 것들이 뻔히 그러지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한 거예요.

이런 게 도덕성입니다. 이런 도덕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군대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위장취업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국가 기금을 갖고 할 수 있는 위인인가 아닌가 이런 도덕성을 검증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문형표 장관이 국가 연금이 기업의 경영에 개입한 것,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징역 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과도하게 국가경제에, 국가주의로 흐르는 것, 특히 연기금이 시장경제, 기업들 경영에 개입하는 것, 이게 나중에 정권이 바뀌든지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나한테 어떻게 돌아올까, 전문가들은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민간 투자회사보다 그렇게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근무환경도 저 지방에 있으니까,

자꾸 제가 특정 지방을 갖다 편애하는 건 아닌데 현실이 수도권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가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이?

이렇고, 페이도 안 좋고 별로 안 좋은데 ‘나는 국가의 기금을 관리한다’는 사명감 이런 걸 갖고 서나 정말 의미 있게 사람들이 지원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국가가 여기다가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것 같이 동의하고 하자’고 했을 때 나중에 정치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당사자는 거기 본부장 이니까 책임지고 징역 가고 이런 우려를 왜 걱정 안 하겠습니까?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을 찾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공모 절차에 ‘절대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 안 하고 본인에게 책임을 안 지게 하겠음’ 한마디만 써 봐요, 줄줄이 서지. 그런데 그런 사람, 국가가 주도하는 연금의 시장개입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동하고 생각이 같고 같이할 사람을 찾으려니까 실력도 있고 딱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포기해서 야지 그렇게 집요하게 이것을 하려고, 사람을 찾으려고 1년을 본부장을 놓고 전부 비전문가들이 연금을 갖고 운용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당장 존경하는 오세재 위원장님이 2060년에서 2050년도로, 2040년도로 고갈 시점이 자꾸 온다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국가경제가 좋아져 갖고 재정이 좋아져서 그것을 대신 충당할 수 있는 돈이 확보가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저성장 시대 또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복지 부담의 노인인구는 많고 그러면 재정부담은 늘어나고 재정수입은 줄고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 갖고 연금 고갈되면 이것을 갖다 대체해 줄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안 나오고 두루뭉술하게 오늘 하루 때우려고, 그러고는 기금운용본부장을 코드 맞는 사람으로 집착을 그렇게 해 대면 어느 세월에 뽑아 갖고 연기금을 관리하겠나 말이에요.

시장에 개입을 하면 할수록 시장은 멀어지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자꾸. 기업들이 떠나잖아요. 기업에 자꾸 연기금 갖고 들어와서 경영권 압박하고 그러면 누가 기업하겠어요, 도망가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은 없지요? 지금 말씀 특별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장 이명수 알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장관님 말씀 안 하시면 저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하면서 죽음에 대한 문화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어요. 호스피스 수진자가 2015년에 4035명에서 2016년 사이에 1만 3473명으로 300%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호스피스 이용률이 95%에 달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호스피스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호인력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첨단장비를 갖춘 호스피스 병동을 마련하고도 간호인력 부족으로 1년 넘게 휴업 상태라는 의료원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의료에는 활동보조인력이 특히 많이 필요한데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좀 부적절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조활동인력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호스피스 보조활동인력 기준을 요양보호사만으로 한정된 것입니다.

지금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의 보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라는 의료보조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스피스 보조활동인력에서는 제외가 됐다는 게 선험 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관님, 호스피스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를 가만히 놔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에 대한 기본 간호 및 신체활동 지원 부분이 많을수록 호스피스 병동 특성을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도 보조활동인력 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 호스피스 보조활동인력에 다른 직종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

는 여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특히 간호조무사는 거기 규정에 넣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만 계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요양보호사 사이에 간호조무사라도 몇 분 같이 있으면 더 안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력에다가, 의료보조인력에다가 꼭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적절한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 안전 문제와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복지부에서도 인식을 하시고 어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늦게나마 복지부가 능동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제가 주장했던 슬리핑 차일드 체크가 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마음에 드는데요. 꼭 필요한 규정과 제도는 만들어야 되겠지만 사고가 나기 전에 이런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사전에 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육환경을 확실히 좀 바꿔야 되겠어요, 장관님. 지난 3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8시간 근무 중에 4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두라는 것 아닙니까? 특례업종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데 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 5세까지,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까지 보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놔두고 1시간을 선생님들이 쉬고 오겠습니까? 정말 그건 맞지 않거든요. 보조교사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 휴게시간을 수업시간에 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유치원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타임제 아닙니까? 유치원은 만 3세부터, 그러니까 5살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0세부터 취학 전 아이들인데요. 그러면 더 어린아이들인데……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어린이집도 2타임제로 해야지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쉴 수가 있습니다, 1시간을. 그렇지 않고는 한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한 명을 지원해 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보조교사가 그래도 한 반에 한 명씩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육환경을 확실히 바꿔야만 지금 말하는 아동학대도 정말 이제 거의 없어질 것이고요, 안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정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과감하게 생각하고 바꿔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설계하고 관계당국과 열심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최도자 위원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김성주 이사장님, 아까 1차 질의에서 제가 시간이 짧아 가지고 끝까지 질의를 못한 것을 연속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하는 것은 635조의 연금금을 관리하는 그 자리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또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게 관치 연금주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기금운용본부장이 어떤 정부의 압력이라든지 청와대의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그런 사람을 뽑는지 아닌지 그런 시각도 굉장히 높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지금 두 가지 포인트에서 마치 진실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공고가 나가기 전에 연금공단 임직원을 시켜 가지고 꺾태선 전 대표를 사전에 접촉 시도한 기사가 나왔는데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꺾태선 전 대표가 중앙일보에서 위에서 탈락 지시가 있었다고, 김성주 이사장님이 ‘장하성 실장과 함께 뽑고

싶었는데 윗선에서 탈락 지시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내정을 했었는지, 그런 말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를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연금 본부장 공모 진행 과정에서 스스로 그 후보가, 꼭 전 대표가 내정자로 믿게 만들 만큼 인선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것을 짚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사장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전주로 불러 가지고 해외출장 계획까지 상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니까 조건을 달아서 ‘보좌관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획을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말 막강한 자리가, 보좌관 뽑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나중에 탈락될 수도 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개인의, 이사장님의 권한이 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요. 이것은 세련되고 안 세련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정말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인사시스템을 통해서 기금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사장님이 그 자리를 어떤 자리로 생각하고 인사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인사의 한 과정으로서 인사권자로서 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가지고요 복지부장관님한테 질문합니다.

언론과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이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코드 도입 입장에 반대가 75%이고 찬성이 25%예요. 그리고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 시 정부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가 81%입니다.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국민이 맡긴 연기금입니다. 국민들이 이것의 도입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7월 달에 도입을 빨리 서두르는 이유, 더군다나 기금운용본부장이 지금 공식인 상태에서 이것을 서두른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름 그대로 자금 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윤리규정입니다.

○김승희 위원 알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리고 그 윤리규정은 이미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쪽에서 전 금융기관이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 금융위 자체에서, 민간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국민연금도 대규모 자금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윤리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기업들이 우려하는 이런 여러 목소리들을 저희들이 귀담아듣고 있습니다마는 좀 지나친 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윤리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 더 기금의 수익성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고 또 기금운용의 투명성·독립성까지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바가 뭔가는 알지만 그것은 정말 우려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희 위원 아니, 지금 기금운용본부장도 공식인데 그 도입을 빨리 7월 달 안으로 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것은 기금운용본부장이 있고 없고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기금운용 전체가 지켜야 될 윤리규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장이 있다 해서 이것이 더 잘 되고 또 빨리 도입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래서

7월 달은 목표가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이것을 시작할 때부터 차근차근 논의를 해 온 것이 그냥 결과적으로 7월 달쯤에 도입을 하는 것으로 최종 의논하게 된 그런 과정을 밟아 왔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것은 복지부장관님이 생각하는 복지부장관님의 견해이고 지금 일부에서는 저기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정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치 연금주의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설득한 다음에 이것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지금 저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 좀 늦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좀 갖추고 나서 이것을 도입하라는 것이 제 지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위원장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김승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수** 간략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이번 기금본부장 임명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혹시 청와대에 의한 인사 개입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인사권자는 연금공단 이사장이다.

그리고 저는 저하고 같이 일하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분을 얼굴도 한 번도 보지 않고 임명할 수 없다, 3배수 압축된 상태에서 검증 과정이 있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시면 향후에 임명 때 그런 절차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관련된 부분은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한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좀 더 크게 보시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왜 이와 같은 사태를 기관투자자들이 막지 못했었냐에 대한 반성에서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삼성 합병사태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켜야 되는 국민연금공단이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외부의 압력과 간섭을 배제하고 임의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준칙을 만들어서 그 지침대로 하자고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개입과 관치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것인데 그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기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수** 어쨌거나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다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따가……

○**김승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청와대의 장하성 실장이 시인을 했어요. 공모하기 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특정인한테, 청와대가 개인한테 연락을 해서 권고를 했고 그게 또 청와대에서도 장하성 실장은 그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특정인을 갖다 정해 놓고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늬만 공모이지 이게 어떻게 개입이 아닙니까? 본인이 모른다고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인사권자라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개입이 안 됐다는 것은,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할 것을 인정하시고 자꾸 아닌 것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명수** 지금 그 문제 가지고 또 팩트 확인하는 것 하면 끝이 없습니다. 정리 좀 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위원님, 지난 2월 달의 공모에 열여섯 분이 응모에 응했습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응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권유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누구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임원심사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압축된 후보를 상대로 인사권자인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김승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앞으로 공모하기 전에 추천을 하실 겁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사장님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저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 자리에 있는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명수** 자, 그 문제는 이제 그만 그 정도 해 주시지요. 다시 또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김승희 위원**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다음에는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조현병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으셨는데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구축 방안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누가 확보해서 집행을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입니다.

○**맹성규 위원** 예산이 지자체 매칭입니까, 아니면 100%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매칭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맹성규 위원** 이게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중기재정계획에 그렇게 자세한 항목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이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계획이 당초보다 늦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맹성규 위원** 다음에 아까 제가 먼저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사회가 좀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시설 입소아동 퇴소 지원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지방이양사업이 되다 보니까 복지부도 사실 거의 손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태를 알고 계세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지금 이 친구들은 주거비용을,

퇴소비용을 일부 받아 가지고 나오고 주거가 있어야 되고 직업 알선이 있어야 되고 몇 가지가 있는데 해마다 한 1000명 이상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따져 보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이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사는 게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LH나 국토부 등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도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실제적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보완 대책을 제가 한번 받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아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선거 과정에서 절실히 하나 느낀 게 있는데요. 저희 사회가 고령화되면 당연히 약값에 대한 지출이 늘어날 것은 예상이 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맹성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약값으로 지출하는 비중이 17년에 보니까 52%인 약 28조 50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선거 과정에서 죽 돌아다녀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드민턴도 치시고 자기 돈으로 월 회비를 내 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하고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집에 계시는 분, 특히 노년 인구 중에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시기가 힘들어서 댁에만 계시는데……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생활체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시설은 문체부에서 지원이 되고 운영비 일부는 건강진흥기금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아니면 노인 계층도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인증을 받으면 좀 더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한다든지……

의료진도 약을 처방하기보다 신체활동을 많이 하게 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유도하고 평상시에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의사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시면 의료관리체계, 의료전달체계의 맨 1차 기관이 그런 기능을 어차피 하게 될 거고요.

다 원원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방적 활동을 통해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많은 선진국들이 사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 부가 최근 마련한 것이 국민 비만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생활체육을 같이 접해서 비만도 관리하고 또 건강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해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제가 다음에는 문제부 등 타 기관에서 관장하는 생활체육 예산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고를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그것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오늘 처음 상임위 질의한다고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말씀 또 대안까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오세세 위원님께서 인구절벽, 저출산의 아주 암흑적인 예견을 하는 데이터를 보여 주셨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 미래의 행복을 만드는 것’ 이것을 장관님께서 어떤 축사에서, 제가 했던 토론회에서 주신 말씀이 거든요.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순례 위원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건데……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2004년도의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에서 무려 10만 6000명의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아동그룹홈에서 275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이라는 대문제 속에서 일단 낳아 놓은 아이들을 사회의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도구로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

동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임금 여부를 따졌을 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아동그룹홈의 시설장이나 보육사가 받고 있는 연봉이 대략 한 2000만 원 정도로 가고 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나 보육사의 처우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특히 1년을 일한 복지사의 임금과 10년을 상회하는 연륜 있는 복지사의 급여 차이가 없다는 것, 이런 현실을 제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PPT를 보시면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연도별 인건비의 확보 계획이 너무나 더디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90% 수준까지 상향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희들도 단계별로 5년 이내에, 그러면 4년 남았네요. 4년 이내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임금 가이드라인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단계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기초단계에서 시작되는 점이 워낙 미약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성장의 속도가 많이 낮게 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의 구조적인 문제를 앞으로 정부 당국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동그룹홈의 복지예산이 기재부로부터 복권기금으로 분류돼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점수를 받는데 그룹홈의 아이들이 어떻게 복권의 판매를 성장시키는 어떤 연출을 할 수가 있으며 그런 것을 변별력을 갖고 가다 보니까 워낙 지원을 받는 다른 단체보다도 아주 미미한 수준의 이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의 불만이 크게 터져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재부와 복지부가 이제는 이 예산의 결과를 가지고 복지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이 문제를 포함해서 범피자금으로 지원받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그것도 저희들이 정식으로 기재부에 토론 과제로 상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일반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기금이나 다른 데서 받는 것은 그에 맞는 용도에 쓰게 하면 좋겠다고 저희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순례 위원**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권 기금 준다고 복권을 홍보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해야지만 더 준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앵벌이를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사실은 마찬가지로의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부족한 국고보조금을 우수 지역아동센터라는 어떤 선별적인 것,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편차별로 벌어지는 임금의 어떤 보조운영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시설장이나 현장을 유지해 가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은 그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시설장이나 아동시설에 관련된 것이 늘 국정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나 언제라도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이유는 그것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하고……

그룹홈이라는 게 뭘니까? 소가정 아입니까? 가정의 형태로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아니면 깨어진 가정 속에서 가정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경험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내줘야 되는, 마땅한 부모의 도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이 어떤 적절한 임금 수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성의와 열성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제대로 좀 쥐서 할 수 있는……

물론 이런 것이 사회복지사나 여러 관련 단체마다 많은 다름과 편차가 있지만 특히 아이들의 복지후생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행위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임금·처우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관련해서 내년 예산을 성립하실 때 기재부 쪽하고도 아주 밀도 있는 토론을 하셔서 이런 것이 적절하게 기금의 성격에 맞게끔 받고 하계끔 정식적인 복지예산으로 성립시켜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가능성이 있으시겠습니까? 면피용으로 그냥 노력해 보겠다 이런 것 말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제가 바로 다이렉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그룹홈은 올해, 작년에 올 때 사실 인건비를 9.1%, 10.6%, 다른 복지시설의 2배 이상 올렸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순례 위원** 그런데 기초적인 게 워낙에 낮았잖아요, 다른 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2022년까지는 100% 채우겠다는 계획하에서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을 제대로 된 항목에 쓰자는 것은 저희들은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데 재정 당국이 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토론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순례 위원** 대토론을 하셔야지요.

아이들에게 복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김순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이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아동 관련 시설 중에 제일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고려하시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는 이게 파트타임으로 아이들을 잠시 케어하는 것으로 보는데 실제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풀타임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다는 거지요, 잠시 시간이지만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는 시간이. 그런 점에서 서로 인식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 본질의에 이어서 스튜어드십 코

드 실무 검토안 첫 번째 문제는 경영권 참여 부분인데요.

장관님, 제가 검토안을 보니까 너무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검토안대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지금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오너 일가 때문에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국민연금이 앞서서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기금의 규모가 무지하게 큼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에 투자되는 것이 한 3800억 정도입니다. 지나치게 어느 한 기업에 편향되어서 개입을 해서 그것이 재계 전체에 악영향을 주거나 하면……

사실 저희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특정 기업에 대한 징벌보다는 기금의 장기 안정성과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좀 짧게……

제대로 해결을 할 수 없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은……

○장정숙 위원 손실 본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정숙 위원 가능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확실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은 그런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장정숙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소극적인 관여로는 기업들이 움직일 요인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외 사례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도 하고 주주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르웨이랄지 캐나다 국민연금이랄지 이런 데서는 사외이사 추천도 하고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경영 참여를 하게 되면 단기수익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저희들이 기금수익을 1차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단기수익을 다 반납하면서까지 경영 개입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반 여건이 갖춰져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경영에 대해서 참여는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감시하는 기능은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정숙 위원 감시하는 기능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여쭙보겠습니다.

의결권 민간 운용사 위임 문제가 있지요, 장관님?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을 맡긴 운용사 역량 검증 잘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거기에 대해서 사실 기금운용본부가 그런 것을 다, 자기가 위탁 준 모든 위탁사의 기능을 감시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보강되어야 됩니다.

○장정숙 위원 그러시면서 이런 것을 저기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대리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짧게 좀 해주시지요, 시간이 없어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해상충이 일어날 때는 의결권을 기금운용본부로 회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규정에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면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만드실 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 철저하게 독립성이 보장 안 되면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연금공단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삼성물산 합병 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당시에도 원래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투자위원회만 열어서 날치기로 처리해 버리셨습니다. 또 책임져야 할 때는 위원회를 앞세우고 정작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할 때는 패싱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회의 독립성, 책임성 어떻게 보장할 계획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연금기금에 관련해서 거버넌스 전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버넌스 전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큰 원리만 말씀드리면, 모든 개인이 참여한 각 위원회별로 발언한 내용을 다 적고 자기가 거기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때 어떤 논리에 의해서 찬성·반대하는지 반드시 논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공개할 것입니다. 일반인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라든지 이해 당사자인 기관에서 요구할 때는 공개를 해서 민주적 통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끔, 그것을 통해서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장정숙 위원 장관님, 2000만 명이 넘는 국민 노후자금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국민 재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보다 면밀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김성주 이사장님, 아까 오전 질의에서 김명연 위원님께서 기금운용본부장 및 실장, 팀장급 자리 공석 건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답변을 국민연금 운용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운용직의 보수 수준을 시장 평균 상위 25%의 수준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장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주요 자리 공석 문제로 인한 공단 운영 차질 문제가 매년 화두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보수 수준 올려 달라, 투자해 달라, 뭐 이렇게만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 공단 측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우개선 및 투자도 중요하

지만 다른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장정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 펀드매니저의 투자기법보다 인공지능(AI)의 능력을 빌리는 투자방법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적연금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장정숙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왜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그러한 시도조차 안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3대 연기금의 위상에 맞는 처우개선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세계 3대 연기금 위상에 맞는 혁신적인 투자 방법이나 대책을 내놓으시지 않는 것입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투자 의사결정은 어떤 기계적인 패턴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시장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사람, 즉 전문가에 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투자의사결정시스템은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200명이 넘는 저희 운용직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공단에 100명이 넘는 일반 직원들이 그것을 잘 지원하면서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장정숙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장관님도 그렇고 김성주 이사장님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삼성 승계 등 이런 개입을 정치권이 또 정부가 하지 않겠다는, 또는 건전한 기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약관은 수동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면 아까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데 뭘 가지고 통제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외이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추천권을, 독립성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추천을 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지 뭘로 견제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의심스럽고,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민주화 부분의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가 아까 일부 답변을 드렸습시다마는 현재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그런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수익금은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국민연금기금의 가장 중요한 기금의 수익성에는 배치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좀 개선되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도 도움이 될 때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동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균형되게 잘 판단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장관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일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거기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가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신동근 위원** 아마 이것은 의료인의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 징계정보를 공개하여 의료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측면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에서 이 의료정보 공개를 마치 의료인을 타깃으로 해서 마녀사냥을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다른 전문인들에 비해서 의료인들이 보호를 많이 받아 온 것은 사실인

데, 그러나 어떤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지금도 그것을 하려고 하면 또 입법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범위 내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국민적인 어떤 여론에 부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동근 위원** 저는 이게 국민에게도 의료인에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에게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의료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뗏뗏함이 없으니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잖아요, 그렇지요? 양자로부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저도 보건의료인인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치과의사인 데 치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신발만 벗으면 입 안으로 들어갈 만큼 가까이에 얼굴을 대고 진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뗏뗏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등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게 다 공개가 되잖아요, 모든 중대범죄에 대해서? 그런데 의료법상 의료인들은 어쨌든 간에 의료와 관련된 부분 말고는 그분이 강간을 했든 살인을 했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징계를 안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공개를 못 하게, 안 하게……

○**신동근 위원** 그러니까 공개를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그 뒤에 이런 문제…… 지난번에 수면내시경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을 때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된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대책을 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것은 언제 일인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아니, 2016년 3월에…… 그때는 장관님 되기 전에 했던 내용이네요. 장관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신동근 위원** 이 문제는 물론 의료인들 모두를 다 범죄자로 몰거나 또 그런 의심의 정형을 갖는다는 자체는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하네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 지금 1년 다 돼 가는데 어떻게 잘 정착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처음에 예정했던 대로 단계별로 보장성을 확대해 가고 있고 별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물론 아까 몇몇 동료 위원님들께서 재정 확보와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문제는 여기서 차치하고, 지금 의료단체와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료단체에서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고 대화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저희들하고 아주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를 하면서 서로 이해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 아무리 좋은 학교 정책도 그 전달자인 교사가 반대하면 그것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의료 전달자인 보건의료인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국민의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그렇게 해서 불안감을 없애 주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윤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차의료기관은 비급여 부분이 줄어들어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네의원들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과거에도 의약분업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없어지면서 그게 보완되지 않는 측면들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보완을 해서 이게 연착륙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신동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성주 이사장님,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2017년 2월에 이

전했으니까요……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1년 반 딱 됐습니다.

엇그저께 주요 일간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논두렁 본부, 전주 리스크, 그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의하시나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까지 동원하면서 지역 이전에 대한 흔들기에 나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모든 것이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서울 중심주의 사고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금융은 지역 의존적인 산업이 아닙니다. 꼭 대도시여, 한 국가의 수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운용직의 이직률이 지금…… 금융업계의 특성상 이직률이 좀 높은 직군이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평균적으로 10% 안팎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금융업계의 이직률을 살펴보니 약 12.3% 나오는데, 그런데 공단 기금본의 이직률은 11.6%로 평균 이하로 되어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2017년의 경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익률을 보니까 2013년에 약 16.7조, 4.19%에서 작년, 2017년에 7.26%, 41.2조로 급증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나 통계가 전주 이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흔들려 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주 리스크라기보다도 기금운용본부의 가장 큰 리스크는, 지금 뭐 스튜어드십 코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속에서 사실은 삼성의 사금고 역할을 했던 것들이 가장 큰 도화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그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1 대 35로 해 버렸잖아요. 기금운용본부에서는 그때 최준규 팀장인가요? 1 대 46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모직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돈 벌어준 거지요. 그래서 그때 손실액을 약 삼천사오백억 정도 평가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기금운용본부에 리스크가 생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기동민 위원께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지금 기금운용본부의 가장 큰 문제가 본부장하고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부재입니다. 기금운용실장을 채권운용실장이 겸임하고 있고 해외증권실장을 또 팀장이 직무대리하고 있고 해외대체실장도 역시 팀장이 직무대리하고 있고 주식운용실 위탁투자팀장은 또 선임 직원이 직무대리하고 있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조직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아까 민간과 공공기관의 어떤 보수체제나 퇴직 후의 취업금지 조항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난관인데, 어쨌든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국회도 함께 마련해서 이 문제를 속히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전주 이전 때문에 생긴 문제로 호도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일부 잘못된, 아까 뭐 서울 중심 이야기했는데 금융 모피아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사람들의 견해들을 반영한 언론들이 횡행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좀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의 간략한 의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 조직이 좀 안정되려고 하면 역시 리더십이 확고히 서야 되고요. CIO 부재 상태를 빨리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석 중이거나 직무대리 상태에 있는 실장은 새 CIO가 와서 인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운용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상반기에 20명을 채용했고 하반기에 34명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향후에 저희가 300명 정도 인력을 500명까지 몇 년에 늘려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책을 해서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부장관님, 폭염이 거의 일상화돼 버렸어요.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올해만 들어와서 5월 20일 이후에 1043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11명이 사망했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역대급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역대급

무더위에 대처하는 역대급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도 엇그저께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취약계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돈 있고 이런 분들은 무더위가 별문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설노동자라든지 농업노동자들 또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노후주택에 있는 분들, 노약자나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의 대책이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동의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광수 위원 여러 가지 조사·연구를 봐도 무더위 속에 가장 큰 피해자는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의 폭염대책을 특별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정부가 폭염도 자연재난의 한 유형으로 넣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안전부가 폭염대책의 주무부서이기에는 한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여러 취약계층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피서시설로 갈 수 있도록 그 시설에 대한 전기료 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일일점검체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자기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에어컨도 없는 곳은 그냥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누구 도움 없이는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지자체하고 특별하게 관심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에도 폭염대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한 대로 특히 취약계층, 그

분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현장 또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대책을 강화해 주시고.

질병관리본부는 크게 이 폭염과 관련해서 뭐 저거 할 거 없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현재 응급실 중심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방수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예, 잘 해 주시기 바라구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사회로 급속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5년, 지금부터 한 17년, 15년 정도 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500만 명이 된다 그렇게 예측되고 있는데 1년에 한 40만 명씩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의료비 문제, 고령화사회에서 가장 크게 늘어나는 것이 바로 의료비거든요. 노인들은 생활비보다도 의료비가 더 많이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의료보장을 70%로 올리고 또 치매 국가책임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적절한 대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총의료비가 OECD에 비해서 우리가 3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증가했는데 앞으로 노인이 매년 40만 명씩 늘어나게 되면 의료비 증가가 더 급속도로 될 것같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총의료비를 어떻게 잘 줄여 나가서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의료인력에 대한 의사 수라든지 간호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있고.

그리고 보험수가와 문재인 케어 관련해 가지고 의료인들이 수가가 낮다고 하고 또 그것은 결국에 처우가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는 인건비가 6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 또 관련된 의료인력들의 처우가 적정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비가 굉장히 급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의사나 간호사의 처우가 어떤 수준이냐 하는 것을 정부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

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잘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쭙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마는 총의료비 지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크게 강조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마을 중심의 돌봄, 아까 영어로 썼다가 크게 야단 들었습니다. 커뮤니티케어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고령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를 마을 단위로 돌림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입원을 좀 막고 또 여러 가지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인들의 임금 실태라든지 이것은 깊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2017년에 했습니다. 여기에서 각 직종별로 의료인들의 임금 수준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래서 건강보험에 관련해서는 OECD하고 대한민국하고 비교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총의료비가 지금 OECD가 GDP 대비 8.9%라고 하니까, 우리는 지금 7.6%라고 하는데 증가 속도로 보면 한 3~4년이 지나면 같은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예측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도 OECD의 의료비보다 훨씬 능가해서 더 폭증할 것 같아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장성도 OECD가 80% 평균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70%니까 이것을 어떻게 또 80%까지 올릴 수 있겠는지 그리고 의료인력과 의료인의 처우를 비교해서 어떻게 적정하게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시고 대처를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보장 재정의 장기 추계를 해 보면 가장 어렵고 또 고민되는 부분이 의료비 증가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몫은 가장 크지만 그것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의료비는 정말 정부의 여러 노력들을

경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아까 국민연금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분에서 1년에 50조씩을 매년 적립해 나갈 필요가 있는가 또 650조에서 1000조, 2000조까지 그렇게 많은 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큰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계 최대의 연기금이, 일본이 제일 연기금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일본이 얼마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약 1400조 됩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1400조인데 우리는 2025년에 1000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경제 규모로 보면 일본이 1400조라면, 우리보다 일본이 경제 규모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쌓아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운용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또 어떤 시점에, 적립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은 수익률의 문제만 있지만 쓰게 될 경우에는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투자했다가 다 회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을 계속 늘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늘리는 것만큼 또 나중에 도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적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적립식으로 운영할 건가 부과식으로 운영할 건가는 학자들 간에도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는 논쟁적인 문제고요. 현재 우리나라 현실로 보면 있는 기금을 잘 활용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 주면서 더 많은 노후소득 보장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기 때문에 운용하는 건데요. 문제는 기금 규모가 커지는 것이 더 큰 리스크이기보다는 그 기금 규모가 일정 시점이 되면 제로가 되는 기금 소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같이 공감하듯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기금의 적립

규모를 적정한 정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고요. 올해 있는 4차 재정추계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오제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여러 의견들을 잘 계속해서 검토를 하시고 정말 그 시기에 또 장기적인 그런 안목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앞서 국가재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런데 복지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을 보면 아주 우리 재정이 넉넉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이 드는데요. 재정이 어려울수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하는데 우리 보육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그 순서가 좀 뒤바뀐 것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장관님, 올해부터 1조가 넘는 예산을 들여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이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柳在仲 위원 그런데 정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시급한 정책은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대표적인 예가 우리 부모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보육료 현실화라든지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참여정부 시절부터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어서 복지부도 확충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보면 2017년도까지 3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이용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9%에 그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또다시 2022년까지 이용률을 40%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柳在仲 위원 장관님 현재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몇 %인지도 알고 계실 것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동 기준으로 지금한 13% 정도……

○柳在仲 위원 그렇지요. 올해를 기준으로 한 14%……

이렇게 추진이 더딘데 2022년에 이용률 40%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한 중점 정책이 왜 추진이 잘 안 되었는가 살펴보니 원인은 바로 집행률에 있는데요.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실행률은 차츰 낮아져서 2017년에 28%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에 있다고 봅니까,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게 예산 집행률은 낮지만 실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는 크게 차질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짤 때는 다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짰 것이고, 실제 저희들은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또 민간을 장기임차로 전환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국공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목표치에 거의 근접하는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은 확충되고 있습니다.

○柳在仲 위원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지요, 사실은? 정부의 어려움인데,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신축하는데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동수당 말입니다, 현재 보니까 월소득 1000만 원에 저축 1억이 있고 서울 소재 4억짜리 주택에 살고 있는 3인 가구가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 정도 가정에 매월 10만 원을 제공하는 것과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짓는 것, 어느 것이 정책이 더 시급한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아동수당 대상을 좀 축소해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 국비 지원율을 50~100% 올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다르겠지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동수당을 90%로 줄임으로 인해서 1조 원이라는 예산이 절약되어서 그것을 보육료 현실화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짓는 데라든지 이렇게 지원이 되면 더 나은 아동의 보호, 지금 여러 가지 아동 안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고 있습니다만도 사실 보육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렇게 처우 개선이라든지 보육료 현실화라든지 어린이집에 지원이 된다면 교사라든지 원장들이 아이들을 더 잘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마냥 천편일률적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 막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도 어떤 그런 데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국가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제로 제가 겪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100% 아동수당을 주기로 예산이 상정되어 있었는데 90%로 줄어들면서 깎인 예산이 복지부 예산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니다. 전혀 다른 부처 예산으로 가면서 복지부 예산은 오히려 그만큼 줄어드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한 영역의 예산을 복지부가 절감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柳在仲 위원 그것은 제가 기초연금 할 때도, 여러 가지 협상할 때도 기재부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해 온 건데 아동수당 줄이는 대신 보육료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어차피 정부 내 부처 간의 절충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와야 되지. 물론 기재부에서야 아동수당 줄이는 그 몇 조 예산을 다른 데 급한 데 돌릴 수 있겠다 하겠습니까만 그것은 복지부에서의 책임이지요. 그렇게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복지부하고 기재부에서 논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국회에 와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柳在仲 위원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동수당 10%가 줄어들면서 그게 다른 부처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柳在仲 위원 다른 부처 SOC 사업 예산으로 바꾸고 이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柳在仲 위원 그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해봐도. 그러면 그것은 보육료 현실화라든지 아이들 케어하는 데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적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작년에 그랬습니다.

○柳在仲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유재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柳在仲 위원**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많구먼.

(웃음소리)

○**기동민 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몇 가지 다 찢겨 먹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나누어 먹어 버렸어.

○**柳在仲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많지. 나는 국회 대정부질문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한테 SOC 사업 예산 줄이라고, 줄여 가지고 보건복지로 하라고 대정부질문까지 했는데. 하긴 그때도 장관이 ‘국회의원님들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야기했더라만. 참 문제구먼. 복지부장관의 힘이 모자라구먼.

○**위원장 이명수** 말씀 감사합니다.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규 위원** 장관님, 문재인 케어 이야기를 또 조금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까.

의료 분야는 모든 과학 분야의 하이테크놀로지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인간이 건강하고 오래 살려는 욕망이 겹치는 곳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것을 그냥 낮춘다고 낮추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케어 이야기를 하실 때 비보험을 100% 없앤다는 표현을 누군가 썼는데, 굉장히 이해를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이 비보험이라는 게 새로운 의료행위가 출연하는 겁니다. 과학의 발달로. 그것은 강물처럼 흘러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일정하게 효력을 검증하고 또는 항시성을 가지고 필요불가결하다는 결정을 하면서 그것이 다음 단계, 보험 단계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보험이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과학의 발달로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 과리잡듯이 두드려 잡는 그런 개념의 출발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3차병원의 시설 현황이 중국에 있는 병원들 시설보다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잘못 때문에 환자들이 집중되고 또 교통의 발달이 집중되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이지 그쪽에 있는 의료행위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치료행위는 대학병원보다 종합병원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시대로 곧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빨리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

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지금 보험심사 기능에서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왜 제한적이나 하면 지금 심평원에서 하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미국의 여러 기법을 유도 못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 원죄가 바로 저수가에 대한 정당성 때문에 아직까지 그 벽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도입되어야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의사들이 현재 있는 의료보험제도에 끌려가기보다는 자기가 소신대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굉장히 의료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신경외과 의사로 있을 때 허리디스크 환자들 100명이 오면 MRI를 꼭 찍어야 될 환자가 전체적으로 15~30%가 안 됩니다. 그것만 안 찍으면 MRI,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소신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풍토 속에서 가능한 이야기이지 지금처럼 저수가로 강요되는 풍토 속에서 다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풍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합치되어야만 의료비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기 전에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천안 지방에서 라돈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이것을 마무리하는 복지부 대책은 무엇인지, 아까 제가 다른 분한테 문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대답드리겠습니다.

현재 라돈침대에 대해서는 생활방사선 안전법에 의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라돈침대의 건강 영향에 대한 평가나 추적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질병관리본부도 암에 대한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위하고 협조해서 역학조사하는 것들을, 협력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일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문가들이 이미 아니까 암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암이 될는지 또는 급성기 병변인지, 만성기 병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광범위한 질병의 레인지 속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부가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것은 앞으로 인

체에 어떻게 해를 끼친다 하는 것을 규명해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라돈 침대를 썼던 사용자하고 그다음에 라돈침대를 만들었던 공장의 근로자들하고 그다음에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실제 근로자들하고, 그 세 분들을 앞으로 역학조사를 통해서…… 라돈이 인체에 정말 유해한가 하는 것을 밝혀 주는 의무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말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복지부에서 역학조사를 해 준다는 쪽으로 마무리하시면 아마 이 논쟁은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국가에서 응급사태 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메르스 사태보다 더 겁나는 질병 잘 아시지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알지요? 장관님, 실제로 이 환자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전반기에 얼마나 죽었는지 아십니까, 환자가 사망했는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70명 아닙니까?

○윤일규 위원 아니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작년에 54명이 사망했습니다.

○윤일규 위원 작년에 54명, 올해 벌써 상반기에 15명이 사망했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치료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제대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서 하지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담당……

○윤일규 위원 연구하는 것이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일규 위원 어쨌든 간에 미국의 NIH에 속하는 것은 국립보건연구원이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람에 대해서 질병을 연구하는 곳은 고작 연구원이 120명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또는 수산물이

라든지 이것을 연구하는 연구인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작 사람에 대해서는 인력이 굉장히 적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질병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적어도 사람을 치료하는 곳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을 연구하는 곳에서는 충분히 다른 곳보다는 인원을 보충해 줘서 제대로 된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윤일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 장관님 저도 어린이집 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통학버스에 의한 사망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매뉴얼을 전달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어린이집 안전관리백과입니다. 통학차량과 등하원 부분에 수록된 안전수칙인데 차량 안전수칙 어디에도 아이들이 차에서 내린 후에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도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차량 안전수칙 즉각 개정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등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선생님은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었습니다. 등원 완료 후 미등원 아동은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을 강제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개선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나치게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리고 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이 26조 3189억입니다.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분류된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건강 증진 강화 485억, 청소년 동아리활동 68억 등 저출산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액수만 늘려놓았지 직접적으로 출산율 개선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4~5년 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출산율 개선 관련해서 세부사업이나 예산에서 관련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고 줄이고 실질적 출산율 개선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 연구하고 하나씩 채워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출산 문제 안 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퍼주기식 저출산 관련 예산 집행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PPT 한번 보시지요.

이번에는 정부 중앙부처 남성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부터 정부 중앙부처의 남성 육아휴직률에 대해서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률은 부처별로 살펴보니 여성가족부가 22.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4.6%로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남성 육아휴직률에서 1등 하고 타 부처에 모범 보이는 한편 정부 부처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17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으로 휴가를 낼 때 직장 상사 및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 76.6% 그리고 ‘자녀로 인해 휴가 낼 때 직장 상사 및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 67.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직장,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절대 아이를 마음 놓고 편하게 낳아서 기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를 확실히 바꿔 주고 출산과 육아를 권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저출산 문제 조금이라도 개

선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는 조사 결과 꼼꼼히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저출산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검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개선책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장관님, ‘술 취한 대한민국’ ‘음주 공화국’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윤종필 위원**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지나치게 술에 관대한 비판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TV 드라마의 잦은 음주 장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 등 관계 부처와 논의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자체들이 음주청정구역 조례를 지정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18년 7월 기준 총 61개 지자체에서 음주청정지역 조례 제정했고 과태료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단속도 어렵고 과태료 부과도 쉽지 않아서 조례 제정해도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결국은 장관님, 음주청정공원에서 과도한 음주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법 통과되도록 그리고 음주청정구역에서 음주행위 근절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주신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는 사실 김상희 위원님이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데 올해 저출산대책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별 관련도 없는 정책들을 예산으로 나열하는 그런 방식은 다 지양이 되었고, 아주 근본적으로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삶에 대해서 질을 높이고 생활에 대해서 만족을 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런 것이 되도록 정책의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비록 현재는 별로 눈에 안 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오고 난 뒤에 많이 강조를 한 탓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6%가 올해의 경우는 8.5%로 약 2배 정도 남성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2배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감사합니다. 더 분발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윤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대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당국이나 국민 모두가 좀 더 절실함이 요구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찢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저한테 일반적인 설명을 하실 게 아니고 ‘국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재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위원 다 공히 찢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지금 아동학대 그리고 또 방치로 인해서 아동·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 크시고, 저도 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아동의 부모님들께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발표를 하였고. 그래서 거의 2~3년 주기로 대책이 수립되는데, 제 생각에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지만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 확대를 통한 보육의 질 확보 이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로환경, 근무환경 개선이 돼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도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보육료

지원단가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동결이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인상이 됐지만 아직도 표준보육비용에 한참 못 미치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정부에서 예산 편성한 상황을 보면 현재 표준보육료에서 10% 정도 부족하다,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정춘숙 위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사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교사들의 헌신과 희생만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교사들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망사고나 어린이 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다 보육교사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있는데 이래서는 사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는 건 알지만 사실은 아까 저출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얘기했을 때 표준보육료를 맞추는 것, 이것이 아마 그 시작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학차량 안전관리 업무가 분산이 돼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차량 안전관리는 행안부, 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보육교직원 교육은 복지부 그다음에 통합차량 신고 및 운전기사 채용은 지자체,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처가, 통합차량 안전관리 문제를 한 부처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것을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통학차량 신고 대수 대비 지자체에 등록한 운전기사가 36.7%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 통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알바를 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돼야 됩니다. 전수조사돼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주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승하차 안전을 일일보고 할 수 있는 지자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일차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통학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감독 방안은 별도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정춘숙 위원 한 가지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연금과 관련해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요. 그래서 한 쪽에서는 관치연금·연금사회주의, 한쪽에서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정책이다, 이런 비판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수탁자 책임을 좀 더 충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오히려 스튜어드십 코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책무조차 포기하려고 하는 거냐, 예를 들면 자산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지금 있잖아요? 아마 내일 결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는 건데,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행사하게 위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자산을 운용하는 것만 맡겼지 수탁한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믿고 자기의 노후자금을 위탁한 것 자체를 다 권한 위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연금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삼성물산 합병 때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권사들이 찬성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민간 운용사들이 정부나 정치에서 독립적일지 몰라도 재벌이나 시장에 굉장히 의존해서 공공적인 부분을 보기보다는 재벌이나 기업들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이나 언론에서 비판한다고 해서, 자본시장법에 또 경영차별이 되어 있다고 해서 먼저 포기하실 필요가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게 된 원래의 정신에 입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뭘 해야 되는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보육교사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일한 맥락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보육료 지원단가가 동결된 것은 3~5세에 대한 누리과정이고, 그래서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작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0~2세만 해당이 되고 3~5세는 교육부 소관이라서 5년째 동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들이 교육부에 대해서도 여러 번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표준보육비용은 지금 재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2교대 가능한 보육교사의 대폭 증대이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저희들이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재정당국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요.

차량 안전관리 전수조사해서 보고하는 것 저희들이 곧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수탁자 책임이행 그리고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하셨는데, 제가 앞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운용사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위임할 텐데 그 경우에도 이해상충의 조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위임 처리해서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용하겠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걱정하시는 바하고는 무관하게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정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질의의 끝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 기동민입니다.

국민연금 CIO 문제, 저는 아까 김명연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무슨 인사청문 대상도 아니고, 물론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 지금 시대적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것이겠지만 좀 특수한 영역 아닙니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광태선이라는 분이 저는 얼마나 그 분야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까지 논란이 될 정도로 한 분야에서 축적을 이룬 분이라면 김성주 이사장님이나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국민들한테 상황의 이해를 구하고 이러저러한 결

격사유는 있지만 지금 국민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책임자다, 이러저러한 흠결들은 우리가 함께 이해를 구하면서 넘어가고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전제로 임명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들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검증기준을 높여 놔 버리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런 거야말로 비상한 정치력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청와대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사정기관 입장에서나 검증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이렇게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보되 국민들에게 양해가 가능한 수위와 정도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양해를 구하고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번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검증에 대한 수위라든지 직종별로 검증기준을 달리해야 된다는 이런 논의가 공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바람직한 토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런 토의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 검증에 대해서는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검증에 통과됐느냐 안 됐느냐 통지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그런 것을 좀 더 활발하게 공개적으로 토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위원 그래서 기준을 갖는 것 찬성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경직되고 화석화된 방침으로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천하의 인재를 모시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파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곧바로 국민에 대한 부담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튜어드십 코드, 저는 정춘숙 위원님과 장정숙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거의 100% 동의를 하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에 위탁을 맡기지 않았다,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충돌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런 정도의 소명으로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

려고 하는 것이고……

절대 비꼬는 것 아닙니다. 김승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여 주셨을 때 기업하시는 분들의 80%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불편을 느낀다, 저는 80%가 반대하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역설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업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불편하지요, 매기 같은 존재일 텐데.

그렇지만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제안하고 그리고 뭔가 비정상적인, 아주 기형적인 오너 구조 이런 부분들이 투명화될 수 있도록 권유하고, 투자 업계에서는 오히려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부분들이 뒤로 후퇴하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선 태산명동에 서일필이예요.

연금사회주의, 정치적 포장과 공격, 겁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당당하게 논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한항공 총수 일가들의 행태 혹은 또 재벌 총수 일가들의 행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나마 견지할 수 있고 함께 토론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연금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들어가서 기업을 잡아먹으려고 함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닌 거잖아요. 아주 투명하게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주주자본주의에 입각해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해라, 임원선임 문제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해라, 그래서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올바른 리더십들을 구축해라,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려고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잘못된 공격에, 정치적 선동이나 프레임에 지레 겁먹고 뒤로 후퇴해 버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조금 시장친화적이거나 아니면 시장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성을 새롭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라도 보완하고 확장해야 될 그런 개념인 거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작 때부터 뒤로 물러서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기동민 위원님께서 아주 올바른 것을 다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달리 해석을 하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개념이나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08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고 난 뒤에 금융시장이나 금융 운용자들이 너무나 비도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윤리적으로 경영하도록 만들자고 해서 미국과 영국에서 생겨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우리도 그대로 그것을 따라가려는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게 연금사회주의라는 이런 명칭하에서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래도 이 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이 올바르게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러서거나 위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체계에서 우려한다면 그 우려를 불식시켜 가면서 차근차근히 가겠다는 것이 저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러남도 없고 과한 것도 없고 그냥 원리원칙대로 윤리 투자를 하게 만들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기동민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기동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의 순서라 그런지 종합적인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2차 질의와 답변 수고 많으셨는데요, 3차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더 계셔서 추가질의를 그냥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역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더 질의를 하고 싶지만 아동수당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아동

수당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1년 내내 아동수당 가지고 국회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지급대상의 범위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지급액이라든지. 그래서 사실상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결국은 여야 지도부에서 합의해 가지고 90%까지, 그러니까 상위 10%를 제외한 90%까지 지급하기로 했고 또 아동수당법이 제정되기 전에 박능후 장관님께서 언론에다 대고 ‘아동수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가구에 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2월 업무보고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그런데 7월 2일 날 은수미 신임 성남시장이 국회가 합의한 소득기준을 무시하고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계획안을 결재를 해서 복지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김승희 위원** 잠깐, 제가 시간 때문에……

그런데 7월 19일 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장관님께서 성남시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시대적 흐름은 지방자치분권이다. 아동수당도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재량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적 균형이 깨지지 않는 한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90%를 주기로 아동수당법에 의해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지방재정이 허락하면 조례로 해 가지고 10%를 더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재량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이해가 갈 수도 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아무리 합의하면 뭐합니까? 지방에서 다시 조례를 만들든 뭐를 해 가지고 10%를 또 주겠다고 그러면 100%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재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회가 90%로 합의했어도, 그게 국비가 있고 지방 매칭비가 있잖아요. 지방 매칭비를 가지고 덜 주는 거예요. 그러면 90%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 80%도 줄 수 있고 또 어디는 100% 줄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무슨…… 아동수당법을 왜 제정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장관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논리가 뭐였나 하면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처에 행정에 드는 비용을 산출해 봤어요. 그것을 산출해 보니까 행정비용 드는 돈보다는 아동수당을 10% 더 주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제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이 행정비용이라는 것은 한 번 세팅하면 그다음에 그 세팅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거고 아동수당은 계속 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행정비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10%를 더 준다는 것은 지역 간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제일 문제는 아동수당법을 제정한 그 입법취지에도 안 맞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방이 그냥 다 각자에 따라서 조레 만들어 가지고 고무줄식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복지부장관님께서도 국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것을 계속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지방재정이 더 많으면 거기다 국비를 줄이세요. 그리고 다른 데 더 필요한 데 주세요. 이것은 법의 합의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이따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제가 발사르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이 ‘이것 정부가 굉장히 신속하게 잘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나 하면 EMA(유럽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7월 5일 NDMA라는 이물질이 들어 있는데 이게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7월 7일 날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조치를 왜 취합니까? 리콜, 회수, 잠정 판매중단 하고 그다음에 회수 조치를 하는데 이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그때 토요일 날, 600만 국민이 고혈압 치료제를 먹고 있어요.

1분 더 주세요.

치료제를 먹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그것을 우왕좌왕한 거예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7월 9일 날 DUR을 통해서 처방된 환자들한테 요양병원 통해서 다 연락이 갔잖아요. 그러면 복지부도 그렇고 식약처도 그렇고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국민이 취할 수 있

는 그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것을 발표해야지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한 엇박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7월 13일 날 이것을 리콜 조치를 했어요. 미국이 더 먼저 알았어요, EMA나 우리나라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취할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다 만든 다음에 리콜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유럽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환자의 조치 대상 의약품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도록 당부하고 있고 담당 의사와의 상의 없이는 절대로 중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먹는 게 중단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차라리 더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하나도 배포한 적이 없어요. 복지부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든 식약처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든 이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정부가 제대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발표만 하면 되는 겁니까?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발표를 하고…… 복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먹는 것하고 중단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나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답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수당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가진 재량권은 지금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그날 언론하고 만나서 한 것도 그것을 현금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상품권을 주느냐, 카드를 주느냐 하는 지금 방식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아동수당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저희 보건복지부로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대로 그리고 통과된 법대로 하위 90%에 대해서 주는 것을 그냥 그대로 준수할 따름입니다.

나머지, 지방정부에서 5%를 더 얹어주고 10%를 더 얹어준다는 것은 전혀 별도의 제도입니다.

그것은 아동수당법하고 전혀 다른 제도예요. 그것을 아동수당법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다릅니다. 아동수당은 국고와 지방정부의 재원이 매칭되어서 우리가 한정된 재원이 내려가는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나머지 대상자를 확대하느냐 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해야 되는 것이지 아동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아동수당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김승희 위원** 그래서 광명시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했어요. 이름만 바꿨어요. 간판만 바꿨어요.

추가질의할까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리고 제가 답변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위원장 이명수** 장관님 답변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발사르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좀 더 면밀히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 그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약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성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준비를 잘 해서 하자고 했는데……

아까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비록 토요일 날 식약처에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짧은 기간 안에 보건복지부나 관련 부처들이 신속하게, 우리가 미리 사전에 충분히 공지되었을 때 준비했어야 될 사항을 그 짧은 기간 안에 다 갖추어서 준비해 나갔다는 그런 뜻에서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위해성분이 발견되면 식약처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다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일단 발표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완성도를 만들어 놓고 발표를 해야지 빨리 발표해 놓고 그다음에 그 혼란을 최소화했다, 그래서 그것은 잘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추가질의 요청하신 위원님들은 지금 김승희 위원님하고 김순례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그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께 다시 한번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취임하시고 이번 1월 30일에 저희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언론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려했던 것은 전공이 아닌 자로서 정치인에 입각한 인선이 아니었나 이런 기우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장께서는 국회의원 4년 동안 국민연금 중심으로 토론회도 많이 하시고 입법을 추진하여 ‘난 전문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순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8개월 동안 정말 이사장께서 얼마나 많은 일에 공을 들이시고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었나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김성주 의원께서는 과거 국민연금법 대표발의를 3건을 하셨더라고요. 하셨고, 통과된 건은 1건이었고 국민연금 정책연구소 설립근거 개정안이었고, 단독으로 준비한 토론회 개최는 한 2건 정도에 불과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사장님의 전문성을 우리가 담보한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됐던 것을 짚어봤어요. PPT를 보시면, 취임식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같은 날 동시에 공공투자 부문이나 공공 부문 간접투자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신 바가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순례 위원** 올해 7월 6일에는 적립금이 고갈을 앞두고 있는 기금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홍보영상까지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약간 불안에 떨게 돼요, 시스템을 바꾸는 게 맞는 얘기인가. 그래서 국민들은 이사장님을 바라보는 게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간과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것들의 우려가 많은 가운데 사실 8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정작 제대로 할 일을 잘 챙기고 있나, 이렇게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특히나 CIO 문제 관계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두고 언론에서는 채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 관치로 가는 부분의 교두보를 쌓은 게 아니냐, 정치 외풍이 불려온 사태 아니냐,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장 후보 낙마는 좀 미스터리다, 이런 등등의 국민연금을 질타하는 독립성의 문제가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수익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7.2%의 수익률 대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수익률은 1.66%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일반 시중은행 예금만도 못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들어 보셨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런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김순례 위원 봤지요? 기사를 본다는 것은 국민의 어떤 여지를 언론이 대변하는 거니까요. 지금 언론이 얼마나 우리를 주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등등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에서 이런 과정을 잘 보살피지 못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냐……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반기에 20명 채용하셨고 또 남아 있는 하반기에 34명 채용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순례 위원 이렇게 틈틈이 비어 있는 것을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공석은 진행형으로 있고 노후연금을 잘 굴려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운용의 목표대비가 현재까지 투자운용의 52%까지로 아직도 떨어져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임 8개월 만에 야심차게 정치인으로서 거듭나면서 이런 이사장님의 중간결과가 어찌 보면 좀 참담하지 않는가, 이런 결과표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이사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2년을 못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2년을 못 채우는 그 평균 재임기간 속에서 8개월이 경과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국민연금을 잘 라이딩하고 재단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이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국민들의 의구심을 어떻게 상쇄시킬 거냐 하는 것을 저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김순례 위원 그래서 지금 독립성이나 수익성이나 안정성 이런 것에 국민의 신뢰를 아직 받고 있지는 못하다, 정치인 출신이라고 매도되고 있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국민의 시각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반전을 해서 투자의 수익, 수익성, 여러 가지 전문성을 확보하느냐는 것에 하루빨리 이사장으로서 책임감을 더 돈독히 하시고 국민 앞에 이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감상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김순례 위원님,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국회의원 입장에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국회 활동을 했습니다만 공공기관의 이사장으로 가서 보니 국민연금공단 스스로 또는 이사장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저도 정치인 할 때는 제가 어떤 주장이든 선명하게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장은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 여러 가지 좀 신중하게 준비하고 나서야 될 측면이 많다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순례 위원 말씀 중에 언뜻 듣고 보면 선명하게 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단체장으로서 어디 개입을 받고 간섭을 받는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러니까 정치인은 주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기관의 장은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천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 국민연금공단은 CEO와 CIO가

동시에 구속되어 있는 사고 난 조직이었고 1년간 공백이 있는 상태에 제가 취임해서 이 조직을 안정시키면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 왔습니다. 특히 삼성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전문성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의 유일한 수단인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필요한 준비들을 해 온 시기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와 같이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기금운용체계의 안정적 확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순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순례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하여튼 국민연금 관리의 중요성에 비춰서 열심히 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 보건복지부장관님, 국립대학교병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대학교병원입니다.

지방은 의료 사정이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립대병원이 지방 공공의료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맞은 말씀입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 막상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교문위에서 국감 당시에 국립대병원 인력 사정을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랬는데 의료인력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기가 짝이 없고 엉망이었습니다.

국립대병원들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매년 정원심사를 하고 있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그런데 물론 기재부에서 최종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기재부에서 최종 판단은 하지만 교육부가 검토 단계에서부터 안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역할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공공의료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병원이 신청을 합니다. 병원이 신청을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시급하지 않다 그러고 삭감해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도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에서 거점병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이 대폭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냥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말고 좀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작년 국감 때 신입 간호사 문제를 지적을 하고 3년 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울대가 일당을 1만 5000원을 주고 있고요 아랫넌 지방대학은 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치를 제가 다 받아 준 적이 있는데, 정원이 없어서 신입 간호사들이 정식으로 입사를 못 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촉탁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제 정규직이 된다는 기약도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퇴사자가 생기면 정식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병원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르기는 했지만 1~2년은 평균 그렇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 특히 지방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인데 정규직 정원도 적으니까 인력 부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관할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립대학교병원이 이름 그대로 교육부 관할이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내놓고 요구하기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부분적으로 의료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은 해 줄 수 있지만 인력 관리라든지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교육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참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정숙 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운 점은 알지만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의 소관 관계가 되겠지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도 너무 그렇게 소관 문제만으로 흘러버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와야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교육부 소관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도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정원 협의 때를 비롯해서 복지부 차원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할 때만이라도 좀 잘 협의를 하셔서 가지고 특히 지역 공공의료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결국은 이렇게 공공의료에 구멍이 나면 국민들의 건강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힘써 주시고 긴 안목으로 볼 때 그 소관 부처에 관해서도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장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문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건데 지금 시점에서 좀 새로운 협의나 새로운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질본 본부장님, 아까 온열환자에 관련된 질의를 했었는데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예산이 올해 얼마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기후변화 예산이……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는데 10억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김광수 위원** 10억이 뭐예요? 얼마 안 돼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4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김광수 위원** 3억 7600만 원.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4억 정도.

○**김광수 위원** 계속 줄어서, 2013년 5억 3500만 원에서 점점 줄어서 3억 7600만 원…… 이게 지금 미래 감염병에 대한 대비나 또 미세먼지 대응 또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폭염.

○**김광수 위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김광수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진행하겠습니까?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산이나 인력이 지금 많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거의 미세먼지 대응에 좀 중점,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중점을 해 오셨고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예방, 홍보, 기반 마련 연구 이렇게 자료 요구했는데, 왔어요? 연구·홍보 이것 가지고 지금 온열질환…… 계속 기온 상승에 대한 상황이, 해마다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 거의 아열대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홍보하고, 예산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정도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근본적인 대책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 피해가 굉장히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영향평가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질본 본부장님 누가 질의를 안 해서 질의를 한번 했어요.

장관님, 올해 지방선거 직전에 정부 여당에서 당정 협의를 해서 전북의 서남대가 폐교된 상태로 있었는데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환영할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방선거 전에, 전북이 현대 군산조선소 폐쇄, GM 군산공장 폐쇄, 서남대 폐쇄, 서남대 의대 폐교 이러면서 지역의 여론들이 좀 뒤숭숭하고 그래서 전북에 선거를 대비해서 뭔가를 하나 던져야 되겠다 이런 계산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환영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조됐어요. 대학만 있고

거점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것입니까? 대개 서울대나 서울대병원,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병원, 지역도 지역 의대와 각각 지역의 국립병원들이 다 있어서 함께 할 때 이게 효용이 극대화되고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거점병원을 서울 중앙의료원으로 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정책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입안 과정을 제가 자세히 좀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남원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어쨌든 남원의료원이 지금 도립의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부 형태로 어떻게 승격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완결적인 구조로 여러 가지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들이 맞지, 수련의를 할 수 있는 거점병원을 중앙의료원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지역에 아무 혜택도 없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해 드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서남대 폐교와 관련해서 전북대 의대나 원광대 의대로 지금 학생들이 다 배치가 됐다는 말이지요. 그와 관련해서 시설이나 교수진을 다 늘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 인원들이 그대로 다시 서남대 인원으로 가면서 원래로 복귀될 상황이에요, 전북대 의대나 원광대 의대는. 그러면 여기는…… 그렇지 않아도 학부모들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광수 위원 시위하고 심했었는데.

이렇게 확충을 해 놓고, 교수진도 확충하고 시설도 확충하고. 그런데 정원은 더 빠져나가서 서남대로 가고 이러면 여기 그동안에 해 왔던 의대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지 이렇게 지역에 짐만 지워 주고 빠지는 것은 이것도 좀 대단히 무책임해 보여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서남대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남원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폐교된 서남대 학생들을 받았던 기존의 전북대 의대나 원광대 의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

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가져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질의 끝으로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장관님, 지난번에 2017년 재가 장기요양기관 등급평가 발표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정춘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체 평균이 8.2점 올라서 79.7점 발표, 기록이 됐고요. 전체 기관의 절반 이상이 A·B 등급을 받아서 굉장히 질이 향상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한 평가가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70%가 D·E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좀 살펴보니깐 이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 평가기준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용구사업소의 인력기준상 관리책임자가 1명만 의무 인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용수급자 관리, 행정적인 업무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채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 질 하락과 낮은 평가등급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이 문제 제기한 건 뭐냐 하면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관련한 법도 내고 이랬는데 이 문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현실성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현실에 맞는 평가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력기준, 서비스를 높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렸고요.

질병관리본부장님께 여쭙어볼 것은 손상과 관련해서인데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긴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손상관리체계가 지금 교통사고는 경찰청,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공단, 학교 손상은 학교안전공제회,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보험처리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경우에는 실제 발생 규모보다 적게 파악이 돼요.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손상 중에서도 사망 가능성이 높고 후유장애가 심각한 다중·중증 손상이 연간 5만 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 중에 사망 21%, 중증 장애 6%, 중등도 장애 1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긴급조치가 초기에 굉장히 있어야 되는데, 2006년부터 진행 중이었던 중증외상 생존조사가 예산 문제로 2018년도에 중단이 되었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정춘숙 위원** 이게 2019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어서 손상과 중증외상에 대한 컨트롤타워와 관리체계를 어떻게 마련하겠는지 이것에 대한 방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으면 답변 주시고요. 필요한 예산 확보 부분도 마찬가지로 통합 DB가 마련돼서 예방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손상은 사망 원인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및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상 관련된 법안에 대한 것들을 좀 용역을 통해서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증외상에 대한 조사체계는 올해 예산이 없어서 중단이 됐는데요. 한 5억 정도 예산 마련이 필요해서 긴밀하게 재정당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좀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춘숙 위원** 저도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상 관련해서는 또 무슨 유행처럼 바람이 불면 돈을 막 퍼주고 이러다가 좀 더 넓은 범위의 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처에서 잘 챙기시고, 물론 저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르탄 관련해서 장관님께 그냥 간단히 질문드리면, 지금 저희도 조사를 해 보니까 7월 24일 기준으로 81.2%에 달하는 의약품 교환 대상자가 의약품 교환을 받았어요. 나머지 지금 한 3만 3500명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지금 정보가…… 혈압약 같은 경우는 고령의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경우지 않습니까? 정보가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지 이래서 아직 못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3만…… 이게 발암 추정 물질로서 굉장히 발암성이 강하다 지금 이렇게 판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NDMA가? 그래서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개별 안내를 적극적으로 좀 해서 꼭 다 교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정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질의 답변이 이제 끝났는데요.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희 위원님.

또 어느 분 계세요?

그러면 김승희 위원님만 하시면 되나요? 한 3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김승희 위원** 아니, 5분 주세요.

○**위원장 이명수**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맨 끝으로 하는 거니까 5분.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희 위원** 아니, 제가 유난을 떨려고 이렇게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아동수당 관련해 가지고 장관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아동수당이 0~5세까지 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 많이 지적했어요. ‘아동수당, 보육수당, 양육수당, 이름 바꾸어 가지고 대상은 똑같다. 왜 꼭 아동수당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하나. 다 합쳐서 이것을 더 많이 주든지 하지’ 이런 얘기했거든요. 수당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또 성남시에서 주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 거고 그리고 돈의 소스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상이 똑같은 거예요, 수혜받는 대상이 0~5세까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이름을 아동수당으로 붙이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을, 뭐 아이키움수당인가 광명시는 또 이름 바꿨더라고요, 그것 논란될까 봐. 이런 식으로 이름 바꾸어 가지고 상위 10%까지 더 주면 100% 주는 거거든요. 모든 아

동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 합의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제가 지적을 한 거고.

그때 뭐가 문제가 됐었느냐 하면 지금 아동들 중에서도 주식을 보유한 아동이 1만 610명이에요. 1818억 원의 주식 보유자가 있어요, 0~5세 아동이. 그다음에 임대주택자로 216명의 10세 이하의 아동이 있었어요. 이렇게 돈이 본인이 많은 아니면 부모가 그 아동의 이름으로 했든 그런 사람까지 다 주는 것은 사회양극화 측면에서 이것 맞지……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요, 그 측면에서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이런 애들은 제외하자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김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간판만 같고 이름만 바꾸고 또 조례로, 법 따로 조례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복지부장관님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복지부장관님은 여기서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되어 가지고 90%까지 주기로 했으면 그것의 법 정신에 맞추어서 해야지, 그건 핑계지요. 이름을 바꾸고 지자체 돈 가지고 준다…… 그러면 어느 지자체는 주고 어느 지자체는 안 주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이거야말로 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뭘 준다고 그러면 당선이 되는 거예요, 선거에.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나중에 이것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름만 바꾸고, 동일 대상한테? 이것을 복지부장관님이 명확하게 철학을 가지고 반대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지요. 이것은 안 됩니다, 복지부장관님.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까, 제가.

복지부가, 지금 실종아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개구리소년 때문에 제정이 됐는데 이때 이 법의 내용은 수사를 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피해 가족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종아동이 범죄 피해자한테 노출되려면 수사를 막아야 돼요. 그것은 경찰청의 소관 업무거든요. 경찰청의 소관 업무가 이 복지부 소관 법에 같이 혼재해서 들어가 있고 실종아동법이기에 때문에 실종 어른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실종 아동이든 실종 어른이든 실종자 수색 및 수사법, 제정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복지부가 반대를 해요. 왜 반대하나? 그 실종아동법의 상당 부분을 들어내 가지고 새로운 법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복지부는 복지부가 잘할 수 있는 것만 가지세

요. 그리고 이게 경찰하고 복지부가 소관 법을 가지고 있는데 경찰보고 이것 협조해 달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애타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정말 잘할 수 있는 소관 부처의 법으로 이동하는데 반대하지 않으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도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것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아니요. 이게 법에 그 내용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법으로, 수사 업무는 들어서만 데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래서 법안소위에서……

○김승희 위원 지금 수사 못 하잖아요. 복지부가 특사경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동의 어떤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신다면 저희도 동의할 수 있으니까 법안소위에서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아동수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늘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치단체장들에게 '자유를 주지만 책임을 저라', '중앙정부에서는 90%만 아동수당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10%를 더 추가로 주겠다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방정부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정치적 책임을 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여지가 참 적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재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들을 다 합쳐 보니까 거의 1만여 가지에 이릅니다. 1만여 가지에 이르는 그 사업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그 자체적인 정치적인 결정 과정을 통해서 책임을 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승희 위원 그것은요 직무유기예요. 지자체가 하겠다고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하게 하면 중앙정부가…… 왜 복지부장관한테 그 안을 제출합니까? 복지부장관님도 함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 복지부장관한테 그 안을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60일 동안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회신을 해 줘야 되는데 ‘나의 원칙은, 나의 소신은 지방자치단체장 너희들이 책임과 권한을 다 가져라’, 그러면 거기서 결정하지 뭐하러 복지부장관한테 그것을 제출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막아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래서 지방정부에 전체 다 맡긴 것은 아니고 지방정부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만큼 자율적으로 가져가 되 책임을 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안이 지방정부에서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벌써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김승희 위원** 여당으로 다…… 이번 지방선거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이번 지방선거가 다 한 당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의회는 유명무실해요. 한 당으로 지금 다 되어 있어요. 논의가 안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논의가 안 돼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장관님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없고 이사장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는 부분이 없는데, 하물며 국회도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한 당으로 다 쏠려 있어요. 거기서 논의가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다 말씀하셨나요? 끝까지 많은 질의와 여러 가지 많은 말씀 해 주신 김승희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시간의 제약이 결국 질의와 답변을 제약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 오늘 준비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정부의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 전반과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다각적인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늘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사후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정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 중에 위원님들 말씀한 내용을 유념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앞으로 보건복지정책 전반과 업무에 반영할 수 있게 최선을

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속 검토와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좀 아쉽고 또 질의하신 위원들도 질의하면 그걸로 우리 위원으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쉬운 일입니다.

오늘 서면질의하신 위원들이 계십니다.

기동민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유재중 위원님, 윤일규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8월 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함께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능후 장관님, 정은경 본부장님, 김성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또 회의장 밖에서 고생하는 많은 직원들에게도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늘 반복되는 거지만 인원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 업무가 제대로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생하시고 여기 오시는 취지는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만 업무가 흑여 안 되거나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일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오후 3시에 개회를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출석 위원(20인)

기 동 민	김 광 수	김 명 연	김 상 희
김 순 례	김 승 희	남 인 순	맹 성 규
신 동 근	신 상 진	오 제 세	유 재 중
윤 소 하	윤 일 규	윤 종 필	이 명 수
장 정 숙	전 혜 숙	정 춘 숙	최 도 자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석	영	환
전 문 위 원	송	병	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	관	박	능	후
차	관	권	덕	철
기획조정실장	김	강	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장	도	태	
사회복지정책실장	배	병	준	
인구정책실장	이	동	욱	
대 변 인	김	현	주	
감 사 관	김	혜	진	
정책기획관	박	민	수	
국제협력관	조	태	익	
비상안전기획관	최	태	봉	
보건의료정책관	이	기	일	
공공보건정책관	윤	태	호	
한 의 약 정 책 관	이	태	근	
건강보험정책국장	노	홍	인	
의료보장심의관	전	병	왕	
건강정책국장	권	준	욱	
보건산업정책국장	양	성	일	
해외의료사업지원관	김	현	숙	
직 무 대 리	장	재	혁	
복지정책관	정	충	현	
복지행정지원관	곽	숙	영	
사회서비스정책관	이	상	진	
장애인정책국장	이	강	호	
직 무 대 리	임	인	택	
인구아동정책관	김	상	희	
노 인 정 책 관	류	근	혁	
보 육 정 책 관	김	서	중	
연금정책국장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질병관리본부

본 부 장	정	은	경
기획조정부장	박	금	렬
긴급상황센터장	나	성	웅
감염병관리센터장	김	현	준
감염병분석센터장	성	원	근
질병예방센터장겸	고	운	영
장기이식관리센터장	지	영	미
감염병연구센터장	박	현	영
유 전 체 센 터 장			

국민연금공단

이 사 장	김	성	주
기획이사	박	정	배
연금이사	김	용	국
복지이사	나	영	희
기금이사직무대리	이	수	철
국민연금연구원장	이	용	하
기획조정실장	이	훈	상
인사혁신실장	정	준	택
감사실장	김	미	경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7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18. 5. 31. 정부 제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7. 최도자·이동섭·이찬열·김중로·신용현·장정숙·손금주·이연주·조배숙·김광수·김승희·김삼화 의원 발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7. 박인숙·정진석·경대수·김성원·이찬열·김현아·이명수·김세연·신상진·김명연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7. 이동섭·신용현·이학재·박주선·주승용·박명재·이연주·김삼화·이찬열·김수민·권은희·유의동 의원 발의)

이상 5건 7월 18일 회부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9. 정춘숙·윤후덕·박정·채이배·김상희·권미혁·기동민·진선미·유은혜·안호영·소병훈·박주민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9. 정춘숙·윤소하·김상희·전혜숙·기동민·박재호·이찬열·송갑석·유은혜·김병기·박광온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 발의)

(2018. 7. 19. 윤종필·임이자·김성찬·이명수·성일종·정태욱·이양수·원유철·신보라·박덕흠 의원 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8. 7. 19. 정춘숙·유승희·권미혁·백혜련·
인재근·전혜숙·김상희·이원욱·기동민·
김병기·송옥주 의원 발의)

이상 4건 7월 20일 회부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7. 20. 김승희·박덕흠·임이자·윤한홍·
이명수·유재중·박성중·이은권·김상훈·
이완영 의원 발의)

7월 23일 회부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
발의)

(2018. 7. 23. 김경진·김세연·장병완·김태흠·
황주홍·장정숙·김종회·김광수·윤영일·
여기구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8. 7. 23. 송기현·김철민·유승희·신경민·
민홍철·유은혜·윤소하·김병기·신창현·
유동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2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
발의)

(2018. 6. 26. 이만희·송석준·장석춘·金成泰·
추경호·이종배·김정재·박순자·김성원·
조훈현·서청원·원유철 의원 발의)

7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